

---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현황 진단과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

2025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제 · 출 · 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현황 진단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의 결과물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식  
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무단 전재·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목 차

1. 연구 개요 .....	01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03
1.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04
1.2.1. 연구 내용 .....	04
1.2.2. 세부 연구내용 .....	05
1.2.3. 연구 방법 .....	07
2. 기존연구와 정책 동향 .....	09
2.1. 기존연구검토 .....	11
2.1.1. 주요 개념 정립 .....	11
2.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기여 .....	14
2.2. 정책 동향 .....	16
2.2.1. 법무부: 외국인 정책기본계획과 관리체계 고도화 .....	16
2.2.2. 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제도 개편과 숙련인력 확대 .....	19
2.2.3. 교육부: ‘스터디 코리아 3.0’과 체류 지원 정책 .....	19
2.2.4. 지방정부 중심 정책 강화: 행정안전부·전북자치도 사례 .....	20
2.2.5. 해외 사례: 다문화 개념을 넘어 다양성·상호문화 권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	23
3.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현황 및 특징 .....	26
3.1. 전북 자치도 외국인 주민 현황과 특징 .....	28
3.1.1. 전북 자치도 외국인 주민 현황 및 특징: 행정안전부 기준 .....	26
3.1.2. 전북 자치도 등록 외국인 현황: 법무부 기준 .....	36
3.2. 전북 자치도 다문화 학생 및 가구 현황 및 특징 .....	45
3.2.1.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현황 및 특징 .....	45

3.2.2. 전북자치도 다문화 가구 현황 및 특징 .....	53
<b>4.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 정책 동향 .....</b>	<b>60</b>
4.1.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정책 환경과 동향 .....	62
4.1.1. 외국인 주민 정책 환경 .....	62
4.1.2.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 .....	74
4.2.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교육정책 .....	80
4.2.1. 다문화교육 정책 환경 .....	80
4.2.2.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	82
<b>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정책 진단 및 제언 .....</b>	<b>89</b>
5.1. 외국인 주민 정책 진단 .....	91
5.1.1.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	91
5.1.2. 외국인 주민 대상별 정책 .....	93
5.1.3. 외국인 주민 정책 성과와 한계 .....	96
5.2. 다문화 학생 정책 진단 .....	99
5.2.1. 다문화 교육의 성과와 과제 .....	99
5.2.2. 다문화교육의 과제 .....	103
5.3. 전북형 외국인 주민 · 다문화 교육정책 및 입법방향 제언 .....	110

## 표 목차

[표 3-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현황 및 비율 .....	28
[표 3-2] 전국 외국인 주민 연평균 증가율(2012-2023년) .....	29
[표 3-3] 전북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성별 포함) .....	30
[표 3-4] 전북자치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현황 .....	29
[표 3-5]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	32
[표 3-6]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시군별 유형별 현황 .....	34
[표 3-7]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시군별 현황 .....	36
[표 3-8]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성별 증감 추이 .....	38
[표 3-9] 전북자치도 국적별 등록 외국인 현황 .....	39
[표 3-10]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국적 현황 .....	40
[표 3-11] 전북자치도 체류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 .....	41
[표 3-12]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	42
[표 3-13]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 .....	43
[표 3-14]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연령 현황 .....	44
[표 3-15]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현황 .....	45
[표 3-16] 전북자치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 .....	46
[표 3-17]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학생 현황 .....	47
[표 3-18] 전북자치도 부모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현황 .....	48
[표 3-19] 전북자치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 .....	49
[표 3-20]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학교급별 현황 .....	51
[표 3-21]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 현황 .....	53
[표 3-22] 전북자치도 및 유사지역 연도별 다문화 출생 비중 추이 .....	54
[표 3-23]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출생 비중 추이 .....	55
[표 3-24] 전북자치도 시군별 일반 가구 및 다문화 가구 평균 가구원 수 비교 .....	57
[표 4-1] 외국인지원팀 업무분장 .....	66
[표 4-2] 전북자치도 시군별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기관 현황 .....	68
[표 4-3] 전북지역 이주민 지원 민간단체 현황 .....	70
[표 4-4]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와 예산 .....	75
[표 5-1] 시·도교육청별 최근 5년 개정 현황 .....	112

## 그림목차

[그림 2-1]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	11
[그림 2-2]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	12
[그림 2-3] 시도별 외국인 현황 .....	12
[그림 2-4] 이민정책 용어에 대한 범정부적 개념 변화 .....	14
[그림 2-5]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	17
[그림 2-6] 지역 특화형 비자 운영 대상 지역 .....	22
[그림 3-1] 전북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성별포함) .....	30
[그림 3-2]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시군별 유형별 추이 .....	34
[그림 3-3]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누적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	36
[그림 3-4]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성별 증감 추이 .....	38
[그림 3-5] 전북자치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변동 추이 .....	50
[그림 3-6]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학교급별 연도별 추이 .....	52
[그림 3-7]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출생 비중 변화 추이 .....	56
[그림 3-8]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 평균 가구원수 연도별 추이 .....	58
[그림 4-1]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조직도 .....	65

# 1. 연구 개요



##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 연구배경

- 행정안전부(2024.10 발표) 기준 2023년 외국인주민은 246만 명(총 인구의 4.8%)으로 역대 최대이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16.6%)와 유학생(+8.9%) 증가가 전체 증가를 견인함. 전북특별자치도는 73,802명(인구 대비 4.2%)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 7,118명, 비한국 국적자(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52,799명,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13,885명으로 집계됨.
- 2024년 전북의 다문화 학생은 9,010명(국제결혼 가정 8,541명, 외국인 가정 469명)으로, 2012년 이후 초·중·고 전 학령 단계에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초등 1.1%(2012)→ 4.7%(2024), 중등 0.5%→ 3.6%, 고등 0.2%→ 2.1%로 증가, 지역 간 비교에서도 전북은 초등 6.1%, 중등 5.0%, 고등 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인구 구조 변화(학령인구 감소)와 외국인 주민·다문화 학생의 동시 증가가 교육·복지·노동·정주 지원 등 다부문 정책에 복합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대상별·생애 주기별·생활 권역별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요구됨.

### □ 연구목적

- 도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존 정책은 분절적 사업 운영·중복 지원·사각 지대 문제를 동반해 왔으며, 중앙·지방 간 정책 정합성, 사업 간 연계성, 근거 기반 의사 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히, 정주·사회 적응·학습 격차·경로 전환(중등→고등, 학교→지역 사회) 등 전환기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 정책 모형과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이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현황·특성·수요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와 정책 환경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전북형 정책 모형(정주 모델, 사회 적응 모델 등)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 간 연계·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입법 방향(조례 제·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을 제시함.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함.

## 1.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1.2.1. 연구 내용

#### □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 증가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현황 진단에서부터 정책 설계 및 입법 제언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분석과 전략 수립 수행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공간적 범위
  - 전북자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광역적 정책 뿐 아니라 시·군·구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책 현황과 사업 운영 실태까지 포괄함. 특히, 도시(전주·익산·군산)와 중소도시·농촌·도서 지역 등 공간적 다양성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와 특화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
- 시간적 범위
  - 기준 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며, 정책 환경 변화와 인구 구조 전환의 장기적 흐름 분석을 위해 2012년 이후 최근 10~12년 간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분석함.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 규모, 다문화 학생 비율, 학령 인구 구조 변화, 정책 대응의 진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함.
- 내용적 범위
  - 전북자치도 외국인 인구 및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가구의 규모·추이·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정책의 현황·성과·한계에 대한 진단
  - 학령 인구 감소와 다문화 비율 증가가 교육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전북형 외국인 정책 모형 설계 및 조례·지침 등 입법 방향 제안을 포함

## 1.2.2. 세부 연구내용

## □ 개념·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 연구의 이론·개념적 토대 확립을 위해, 먼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사회의 정의, 범주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국내외 학술 담론과 정책 논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함.
  - 개념적 정립: 외국인 주민, 다문화 학생, 다문화 사회, 사회 적응, 정주 지원, 사회 통합 등의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적 적용 범위를 설정함.
  - 정책사(史) 및 동향 분석: 중앙정부(행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와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정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제도적 변화를 분석함. 이를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복지 중심에서 사회 통합, 다양성 관리,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어 온 과정을 체계화 함.
  -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학계와 정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논쟁과 정책 및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정책적 공백을 체계화 함.

## □ 현황 및 정책 환경 진단

-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의 규모와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증가가 지역 사회 정책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진단함.
  -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교육부·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의 연령, 성별, 출신국, 체류 자격, 거주지, 취업 형태 등 세부 특성을 파악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급별 분포, 학업 유지율, 진학률, 학습격차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 정책환경 변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증가가 교육, 복지, 보건, 노동, 지역사회 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병행되는 구조적 전환이 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대상군 세분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자녀 등 주요 대상군을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 수요, 지원 필요성, 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상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

## □ 정책·사업 종합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현재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되어 온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정책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개선 전략을 제시함.
  - 정책 및 사업 현황 조사: 전북 도·시·군에서 추진 중인 모든 외국인·다문화 관련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추진 체계, 자원 구조, 운영 방식, 성과관리 지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 문제점 진단: 사업 간 중복·단절·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부문 간 연계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분석함.
  - 연계·통합 방안: 교육·복지·노동·보건·정주 등 부문별 사업을 상호 연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함.
  - 정주·사회적응 정책 모델 설계: 생애 주기(입국 초기-적응-사회 참여-자립), 생활 권역(도시·농촌·도서), 전환기(초중등→ 고등, 학교→ 사회 진입 등)를 고려한 전북형 정책 모델을 도출함. 이 모델은 제도 설계 뿐 아니라, 행정 조직, 협력 네트워크, 서비스 패키지, 자원 조달 구조까지 포함함.

## □ 정책 제언 및 로드맵 수립

- 최종적으로 정책 실행과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단기 및 중기 단계별 추진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제시함.
  - 단계별 정책 제언으로 단기(1년)와 중기(3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단기 제언은 제도 기반 정비, 조례·지침 개정, 시범사업 도입, 시·군별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함. 중기 제언으로 통합 서비스 센터 설립, 생활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 정착 등을 포함함.
  - 성과지표 설정: 정착률, 학업 유지율, 사회 참여율, 정책 수혜율, 취업률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연차별 목표치와 평가 체계를 설계함.
  - 입법 방향 제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조례·지침의 제·개정(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 협의 절차, 법제화 일정, 시행 시 예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1.2.3. 연구 방법

## □ 정량분석

## ● 인구 통계·사회 통계 분석

- 행정안전부, 교육부, 통계청, 법무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0~12년간 외국인 주민·다문화 학생 규모, 체류 자격, 연령·성별, 출신국, 거주 지역 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특히 학교급별(초·중·고), 지역 유형별(대도시·중소도시·읍면·도서 지역) 변화 추세를 계량화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도출함
- 교육·복지·의료·노동·정주 관련 행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외국인 주민 대상 정책 참여율, 프로그램 이용 현황, 취업·취학·사회 적응 패턴을 파악함
- 대상군(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자녀 등)별 정책 수요 구조를 교차분석하여 정책 수혜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계량적으로 식별함

## □ 정책분석

- 중앙정부(행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및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광역·기초 지자체의 전략 계획, 조례, 사업 계획, 재정 투입 구조,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
- 정책 수단·목표·대상·재원·거버넌스 구조를 다차원 비교하여 정책 정합성, 중복·공백 영역, 구조적 한계를 평가함.

## □ 정성연구 및 통합 설계(정책 모형화)

## ● 정책 수혜자 질적 조사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학부모, 유학생 등 실제 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 서술형 조사,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제도 이용 경험과 전환기(입국 초기-정착-교육-노동 시장 진입 등) 위험 요인을 도출함.
- 이를 통해 통계 자료로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사회문화적 장벽, 제도 접근성 문제, 정책 수용성을 질적으로 규명함.

## ● 통합 설계 및 정책 모형화

- 정량 및 정성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생애주기별·생활권역별 맞춤형 전북형 외국인 정책모형을 설계함.
- 정착 초기-적응-사회 참여-자립 단계별 핵심 과제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기관 역할·거버넌스 체계를 구조화 함.
- 현행 조례 및 지침 분석을 바탕으로 조례 신설 및 개정(안)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 협업 구조를 포함한 정책 실행 로드맵을 작성함.

## 2. 기존 연구와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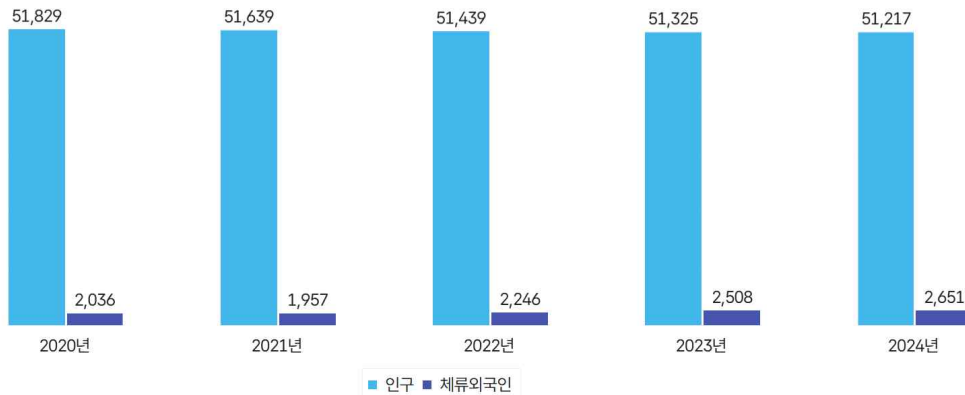
## 2.1. 기존 연구 검토

### 2.1.1. 주요 개념 정립

#### □ 외국인 주민 구성과 주요 특징

- 외국인 주민은 크게 1)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2) 한국 국적 취득자, 3)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분됨. 이 가운데 非 국적 보유 외국인의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를 견인한 반면, 귀화자와 외국인 자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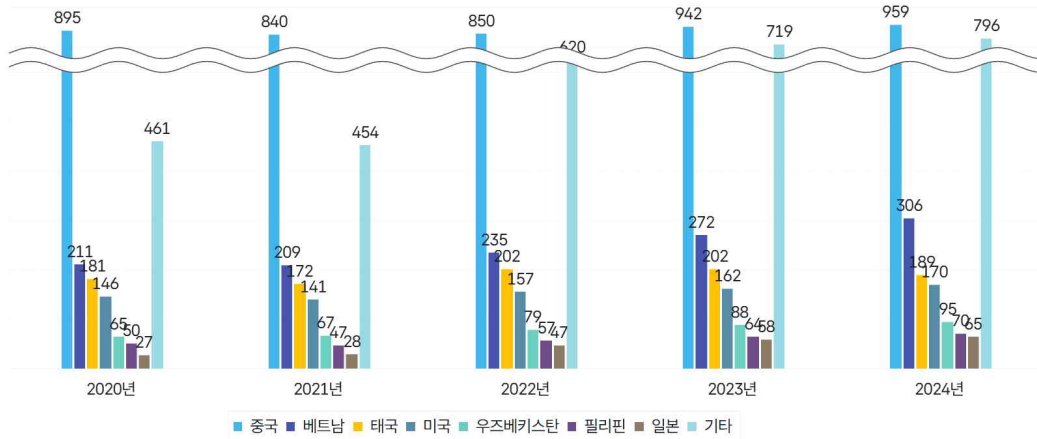
-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2020~2024)을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 4.89%, 2024년 5.2%로 증가함(법무부).



[그림 2-1]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출처: 법무부(moj.go.kr, 검색일: 2025.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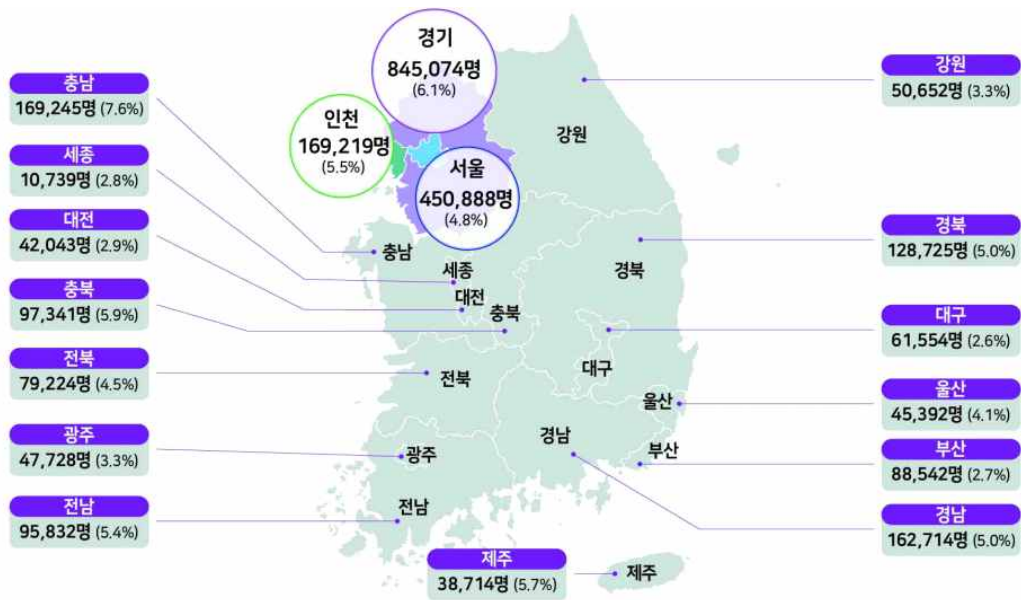
- 연도별, 주요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1.5%, 태국 7.1%,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3.6% 순임(법무부).



[그림 2-2]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출처: 법무부(moj.go.kr, 검색일: 2025.10.01.)

- 외국인 주민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과 일부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됨.
  -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주민의 56.7%인 1,465,1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경기 32.7%명, 서울 17.5%, 인천 6.5% 순임.



[그림2-3] 시도별 외국인 현황

\* 출처: 행정안전부(2024), p.3

## □ 시민권과 구별되는 주민권의 개념

- 주민권(denizenship)은 시민권(citizenship)에 의한 국민과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외에도 지역 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인 생활 인구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임(전대욱 2023).
  - 주민권은 법적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여 법과 자치법규로부터 소외된 외국인에 대해 인권보호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마스크 백신 등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면서 이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보조자에 머문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이며 지역특화적인 전략을 기대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08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방자치법’ 상 주민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외국인 주민과 다양한 체류자에 대한 포용적이며 사회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정동재 외 2022; 전대욱 2023).
  - 이를 위해, “주민권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립과 이에 기반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법한 권리 주체로서의 주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 및 자치법규의 개선 등에 관한 제언이 제기되고 있음(최영미 2021; 정동재 외 2022; 전대욱 2023)

## □ 외국인 정책의 의미와 범주

- 외국인 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 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함(법무부 2024).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을 일컫음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민들이 ‘이민’이라는 용어를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 정책’으로 명명함
  -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그 특성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을 특화한 정책 명칭’인 외국인 정책이라는 용어를 지속

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이에 대상을 특화한 정책 명칭이 아닌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함



[그림2-4] 이민정책 용어에 대한 범정부적 개념 변화

\* 출처: 법무부(2024), p.6

## 2.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기여

### □ 선행연구의 한계 (외국인 정책 관련 내용 필요)

- 대부분의 연구가 고등교육 단계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국한되어 있어,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문화 교류의 주체로만 다루고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과는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함.
-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분석이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강해,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 실험과 정착 전략, 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함.
- 기존 연구 대부분은 유학생 유치 이후의 취업·정착·사회통합 과정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유치→교육→귀국'이라는 선형적 과정에 머무르며 지역 사회가 유학생을 '인구 자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 □ 연구의 차별성

-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과 유학생 정책 결합 연구) 본 연구는 유학생 유치를 단순한 고등교육 정책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인구정책 도구로 재구성함

- 특히, 생산 가능 인구 확보, 노동력 수요 충족, 정주 인구 확충 등 지역 인구 정책의 핵심 목표와 유학생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지님
- (고등학교-대학-정주를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적 접근 제시) 기존 연구가 대부분 대학 유학생 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술 인재 유치, 대학 단계에서의 학업 및 취업 연계 지원, 졸업 이후 가족 동반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함
  - 이를 통해 유학생을 '일시적 방문자'가 아닌 '잠재적 지역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함
-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실험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안) 본 연구는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산업 구조·대학 역량·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 정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전북의 지역사업(농생명, 바이오, 이차전지 등)과 연계한 유학생 취업 경로 구축, 광역지자체 주도의 취업 박람회, 플랫폼 운영, 가족 단위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 정책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함
- (정주 인프라 및 사회통합 정책을 포함하는 다층적 접근) 단순한 입학과 졸업 중심의 유학생 연구에서 벗어나, 주거·보육·법률 문화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 통합 조건을 분석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제도적 포용 방안까지 검토함
  - 이는 외국인을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 및 정책적 의의를 지님

## 2.2. 정책 동향

### 2.2.1. 법무부: 외국인 정책기본계획과 관리체계 고도화

- 법무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계획(2023~2027)을 추진 중임.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및 이민 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함
  - 제4차 계획은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 전략으로서 외국인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전 계획과 차별됨
  - 특히 이민 단계별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강화, 지역 주도의 외국인 정책 추진, 불법 체류 억제 및 체류 관리 정교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차별 방지 강화가 핵심임
  -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플랫폼 구축,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 글로벌 우수인재 비자 신설, 지역 특화형 비자 도입 등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 수요와 연계된 체류·취업 제도를 통해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전북자치도에서는 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순창 등 6개 시군이 선정되어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예: 기숙사 지원, 취업 상담, 문화 적응 교육 등)을 운영 중임
- 정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단순 관리 중심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 사회 통합, 인권 존중,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이민 정책 체계로 전환함.
  - 특히 심화되는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인재 경쟁, 국제 이주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들과 차별성을 가짐
- 정부는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이민 활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외국인 인력 수급 체계를 다층적으로 개편하고 있음. 고용허가제(E-9) 개선과 숙련·전문인력(E-7) 유치 확대, 계절근로제 확충 등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할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연계 및 장기 정주 지원을 통해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함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이민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그림 2-5]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 출처: 법무부(2024), p.7

-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추진됨. 자동출입국 심사, 전자여행허가제(K-ETA),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국경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및 체류 질서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법·제도 이해, 언어·문화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사회통합과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 과거의 일방향적 통합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상호문화 교류정책을 추진함
  - 난민 지원 및 인도주의 체류 제도를 확대하고, 재정적 난민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추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장려하고 있음. 이를 위해 중앙-지방 간 정책 협력 채널 구축,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범정부 조정기구의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됨
  - 이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청(가칭)’ 설립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음
- 제4차 계획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서 국제 이주 확대, 디지털 이민 행정 도입, 기술 패권 경쟁 속 인재 확보, 이민에 대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괄함
  - 특히,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 확대는 향후 고급 인력과 유학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함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인적자원 전략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회통합 전략의 핵심 변수로서 재구성하고 있음
  - 이는 본 연구에서 외국인 정책을 지역 발전, 교육, 산업, 사회적 수용성 등의 종합적인 틀 속에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제도·정책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2.2.2.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제도 개편과 숙련인력 확대

- 2004년 제정된 「외국인 고용법」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고용허가제(E-9)는 현재 숙련형 인력 공급과 장기 정주 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과거의 단기·저숙련 중심에서 벗어나 준숙련·숙련 인력 체계적 양성(E-7-4 확대), 사업장 고용한도 완화, 서비스업 및 일시적 직종까지 확대, 공공기숙사 및 주거 지원 연계, 고용·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유학생의 E-9 전환 특례, 장기 근속 숙련자의 체류 연장 등은 교육·노동·정착 연계 정책으로 단순 노동력 확보를 넘어선 중장기적 인력 전략으로 평가됨

## 2.2.3. 교육부: ‘스터디 코리아 3.0 (Study Korea 300K Project)’ 과 체류 지원 정책

-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적자원 확보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최근 발표된 ‘스터디 코리아 3.0’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서 나아가, 입학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임. 이 정책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국가 인적자원 확보, 지역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내포함
- 본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국내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그리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의 격화임. 현재 대학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국내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수립함
-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제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은 학비 경쟁력, 생활 환경, 산업 연계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교육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함

-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재정 능력 입증 기준 완화(지방대 기준 1,600만원), 유학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 (유학생의 역량 개발 및 체류 지원): 한국어능력 인정 범위 확대(세종학당·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인정), 시간제 취업 시간 확대(주 25시간) 및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 허용
- (유학생-산업 연계): 산업체 인턴십, 현장 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또한,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관리를 위해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강화하고,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함
-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크게 확대됨. 전문·학사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0년 6만 명에서 2022년 12만 4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함. 이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OECD ‘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 (2023)’에 따르면, 한국은 유학생 유치 매력도에서 37개국 중 9위를 기록함. 등록금·취업요건·배우자 동반 등 조건을 개선할 경우 최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이는 유학생 정책이 단순한 고등교육 전략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 인재 확보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스터디 300K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수요자가 아닌 국가 경제·산업·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함. 이를 통해 한국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역 인구 구조 개선,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라는 복합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수립과 지역 맞춤형 전략 설계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

#### 2.2.4. 지방정부 중심 정책 강화: 행정안전부·전북자치도 사례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개선
  -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인프라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전북의 경우 외국인 소통공간 조성(전주), 다문화여성 배움터 조성(고창),

안심거리 조성(군산) 등 지역 맞춤형 생활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임.

-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계획: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2025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함. 이번 계획은 2026년까지 2개 연도에 걸친 다년도 체계로 추진되며, 85개 기초지자체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 배정(신청 5,156명 대비 98.3%)을 통해 지방의 인력난 완화와 정주 유인을 동시에 강화함.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모 절차는 폐지하여 성과 기반의 배분 체계를 확립함.
- 이번 운영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지역의 확대임. 기존 인구감소 지역(89개)에 더해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을 추가하여 총 107개 시·군·구로 넓혔고, 각 지자체는 지역 산업·대학·생활 여건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인 유치·정착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 특히 전북자치도의 다수 시·군이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외국인 인력·유학생 정착 전략과 직결되는 정책 환경 변화임.

광역지자체명	인구감소지역(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통영시

[그림 2-6] 지역 특화형 운영 대상 지역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를 신설한 점도 주목됨(법무부 2025). 그간 지역특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체류자격 보유자가 국내 2년 이상 합법 체류하고, 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R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 더 나아가 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의 전환까지 가능하도록 연계해 숙련 인력의 장기정주 경로를 제도화함.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동일하게 대상지역 내 단순노무 취업 허용을 확대해 가족 단위 정착 유인을 강화함.

● 전북자치도

-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다수 포진해 있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외국인 유학생-산업 연계형 인력-장기정주 가족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구-산업-정주

선순환 모델의 실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도내 대학의 유학생(스터디 코리아 연계)과 E-9·E-10 체류자를 E-7-4R → F-2R로 단계 전환시키는 경력 설계형 프로그램, 시·군별 전략사업(농생명·바이오·이차전지 등)에 맞춘 현장훈련·취업 매칭 플랫폼, 배우자 취업 허용과 연계한 가족 단위 주거·보육 패키지, 기업 한도 완화(최대 50명)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다수 고용 트랙 등을 통해 정주율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음. 이러한 설계는 지자체 추천-정주관리-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통합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됨.

-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① 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유입 전략, ② 교육-노동-정착 연계형 유학생 정책, ③ 지역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비자 제도, ④ 외국인 주민 대상 사회통합 및 생활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구축하고 있음.
-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외국인 정책을 국가 단위 이민관리나 다문화 사회 통합에 한정하여 분석한 것과 달리, 지역소멸 대응 전략, 인적자원 확보 정책, 산학연계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음.

### 2.2.5. 해외 사례: 다문화 개념을 넘어 다양성·상호문화·권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 ● 캐나다: 법률을 통해 다양성·평등·참여의 국가적 프레임을 제도화

- 캐나다는 1988년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를 제정하여, 다문화주의를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 원칙으로 선언함. 이 법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사회·경제·정치적 삶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함.
- 특히 이 법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이 캐나다 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공공정책 전반에서 차별을 제거하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규정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교육, 고용, 공공서비스, 시민참여 영역에서 차별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정책 성과의 핵심 지표로 삼아 왔으며, 다문화 정책을 복지나 보호의 영역이 아닌 권리와 시민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
- 이 사례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즉, 외국인 주민이나 이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기 보다 권리·평등·참여를 조례의 목적 조항에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 고용, 행정, 공공서비스 전반에서의 접근성 장벽을 일

마나 제거했는지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호주: 다문화 정책 프레임의 주기적 재검토와 갱신

- 호주는 2024년 ‘Multicultural Framework Review’를 통해, 기존 다문화 정책의 원칙과 실행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함. 이 검토 과정은 다문화 정책이 사회 변화와 이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공공정책 영역임을 분명히 함.
- 특히, 정책 원칙, 정부 역할,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응집력 등의 요소를 다시 정의하고,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주기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제도화 했다는 점이 특징임.
- 이 사례는 지방정부 조례 역시 한번 제정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정책 기본원칙과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편할 수 있는 검토·개정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유럽평의회: ‘Intercultural Cities’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문화 정책의 지역화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CC)’을 통해, 도시와 지방정부가 이주와 다양성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발전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정책 전환을 유도함.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가 기존 정책을 상호문화(intercultural) 렌즈로 점검하고, 행정·교육·도시 계획·치안·문화정책 전반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됨.
- ICC의 핵심 개념은 다문화(multicultural)가 서로 분리된 집단의 공존에 머무를 위험이 있는 반면, 상호문화(intercultural)는 집단 간의 일상적 접촉, 상호 작용,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데 있음.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학교를 단순히 이주배경 학생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도시 전체의 상호문화 역량을 형성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인식함.
- 유럽평의회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차원의 상호문화 교육 정책, 학교 운영, 교사 연수,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정책 브리프와 평가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이 사례는 국내에서 다문화특구나 외국인 밀집지역 정책 수립 시, 이를 단순한 관광 자원이나 상징적인 공간으로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함. 교육, 도시 재생, 치안, 문화정책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전략으로 묶고, 학교를 지원대상 학생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공 기반 시설로 재정의하는 조례 설계가 필요함.

- UNESCO: 문화다양성을 국제규범으로 정착시킨 사례
  - UNESCO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인류 공동의 가치이자, 보호·증진해야 할 국제규범으로 확립함. 이 협약은 문화 간 상호 존중과 대화를 핵심 목표로 삼으며,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 협약의 함의는 다문화라는 특정 집단 중심의 용어를 넘어서, 모든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문화다양성을 제시했다는 데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문화라는 용어 대신, 문화다양성, 상호문화 대화, 포용을 상위 가치로 설정할 경우, 특정 집단을 낙인화 하거나 구분하는 프레임을 완화하면서도 정책 정당성과 국제 기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3. 전북 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학생 현황 및 특징



### 3.1. 전북 자치도 외국인 주민 현황<sup>1)</sup>

#### 3.1.1. 전북 자치도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기준)<sup>2)</sup>

##### □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비율(2023년 11월 기준)

시도	총계(명)	비율 (전체)	인구수(명)	외국인 비율
경기도	809,801	32.9%	13,815,367	5.86%
서울특별시	449,014	18.3%	9,384,512	4.78%
인천광역시	150,643	6.5%	3,025,950	4.98%
충청남도	160,859	6.3%	2,216,332	7.26%
경상남도	155,589	6.1%	3,271,148	4.76%
경상북도	118,274	4.8%	2,589,880	4.57%
충청북도	83,401	3.7%	1,641,481	5.08%
전라남도	86,729	3.5%	1,776,668	4.88%
부산광역시	89,823	3.4%	3,279,604	2.74%
<b>전북특별자치도</b>	<b>73,802</b>	<b>3.0%</b>	<b>1,794,972</b>	<b>4.11%</b>
대구광역시	58,944	2.4%	2,379,188	2.48%
광주광역시	41,698	2.0%	1,457,090	2.86%
강원특별자치도	46,856	1.9%	1,528,014	3.07%
울산광역시	39,959	1.7%	1,107,432	3.61%
대전광역시	48,950	1.6%	1,470,336	3.33%
제주특별자치도	36,830	1.5%	676,767	5.44%
세종특별자치시	10,451	0.4%	386,261	2.71%
전국	2,459,542	100%	51,801,002	4.75%

[표 3-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현황 및 비율

-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주민은 73,802명으로 전국 총 등록 외국인 2,459,542명 중 약 4.1%를 차지함.
- 절대 규모로는 전국 10위권(중위권) 수준이지만, 전북자치도 인구 179만명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4.11%로 전국 평균(4.7%)보다 낮음 편임.
- 인구 규모가 유사한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와 비교했을 때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수(73,802명)는 충북(83,401명), 전남(86,729명)보다 적고, 강

1)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현황 분석은 외국인 주민의 규모, 증감, 분포 등 지역적 현황 분석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를 국적별, 체류자격, 연령별 특성 등은 법무부 등록 외국인 현황 자료(2025년 6월 기준)를 활용하였음.

2) 행정안전부. 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2023년 11월 1일 기준)

원(46,856명)보다 많음.

- 반면에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충북(5.0%), 전남(4.9%)보다 낮고 강원(3.7%)보다 높았음. 즉 인구 규모가 유사한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 연평균 증가율(2012-2023년)

시도	전체	남성	여성
전국	14.9%	17.4%	12.4%
제주특별자치도	37.20%	43.20%	31.10%
세종특별자치시	29.90%	39.00%	22.10%
충청북도	24.30%	31.30%	17.30%
광주광역시	24.10%	22.80%	25.40%
충청남도	23.40%	31.00%	16.20%
전라남도	22.10%	26.70%	16.80%
인천광역시	21.60%	25.20%	18.30%
경상북도	20.40%	27.70%	13.60%
전북특별자치도	20.30%	18.70%	21.90%
강원특별자치도	19.80%	15.90%	24.40%
경기도	17.50%	22.60%	12.50%
대구광역시	17.20%	17.10%	17.30%
대전광역시	15.40%	14.40%	16.70%
경상남도	14.60%	31.90%	0.90%
부산광역시	14.00%	15.00%	13.10%
울산광역시	13.50%	23.30%	4.40%
서울특별시	2.50%	-2.50%	7.70%

[표 3-2] 전국 외국인 주민 연평균 증가율(2012-2023년)

-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주민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 14.9%로 나타났으며 제주(37.2%)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 뒤를 이어 세종(29.9%), 충북(24.3), 광주(24.1%) 순으로 높았음.
- 전북자치도는 20.3%로 전국 9위 수준이며 반면 서울(2.5%)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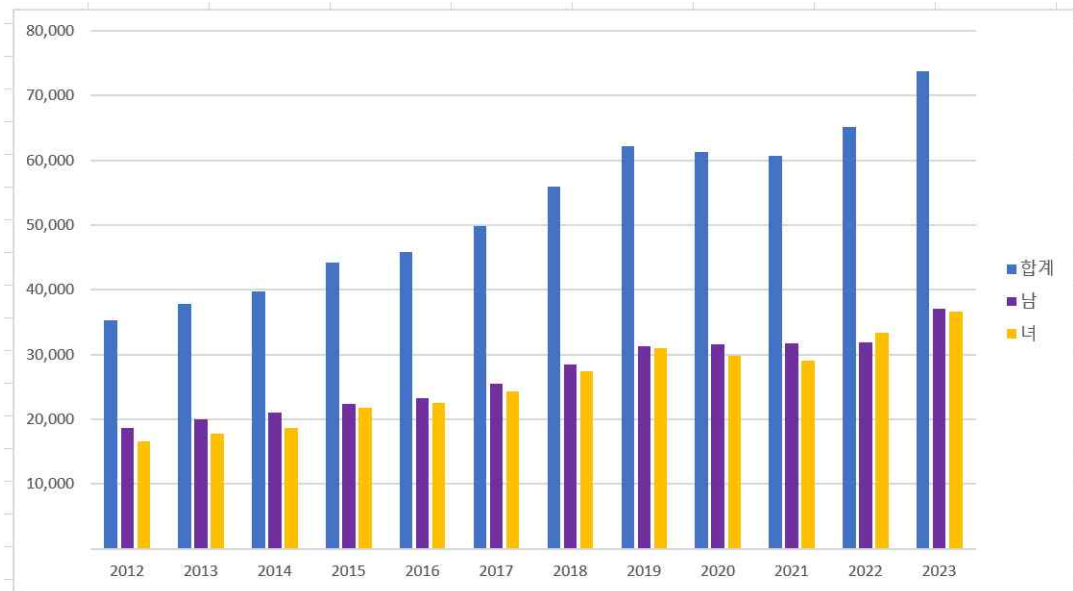
경향을 보였으나 광주, 전북, 강원, 대구, 서울에서는 여성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은 남성 증가율이 유일하게 마이너스(-2.5%)를 기록하였음.

- 전북자치도를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 전남, 강원과 비교해 보면 네 지역 모두 20% 이상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음. 다만 성별로 보면 충북과 전남은 남성의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전북과 강원은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음.

### □ 전북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5,281	37,788	39,777	44,184	45,836	49,840	55,940	62,151	61,316	60,684	65,119	73,802
남성	18,692	20,065	21,097	22,394	23,279	25,539	28,461	31,209	31,585	31,658	31,822	37,135
여성	16,589	17,723	18,680	21,790	22,557	24,301	27,479	30,972	29,731	29,026	33,297	36,667

[표 3-3] 전북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현황(성별 포함)



[그림3-1] 전북 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성별 포함)

-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수는 2012년 35,281명에서 2023년 73,802명으로 10년 새 38,521명(약 2.1배) 증가하였음.
-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입국 제한 및 체류 연장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가 나타났

음.

-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북 자치도 지역의 외국인 주민 규모는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2년 18,692명에서 2023년 37,135명으로 18,443명(약 2.0배 증가), 여성은 2012년 16,589명에서 36,667명으로 20,078명(약 2.2배 증가)로 모두 증가하였음. 남성의 절대 규모는 여성보다 많지만, 증가 속도는 여성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음. 특히 2022년에는 여성 비중이 남성을 상회한 특징을 보임.

□ 전북자치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2023년 11월 기준)

시군	외국인(명)	비율	인구수(명)	외국인 비율
전주시	17,694	24%	652,807	2.7%
군산시	13,374	18%	268,423	5.0%
익산시	11,229	15%	276,043	4.1%
완주군	6,670	9%	101,982	6.5%
정읍시	5,991	8%	106,686	5.6%
김제시	4,750	6%	84,115	5.6%
고창군	3,177	4%	53,267	6.0%
남원시	2,875	4%	77,961	3.7%
부안군	2,185	3%	50,219	4.4%
진안군	1,139	2%	23,578	4.8%
장수군	1,243	2%	24,936	5.0%
무주군	1,168	2%	21,415	5.5%
순창군	1,106	1%	27,179	4.1%
임실군	1,201	2%	26,361	4.6%
총계	73,802	100%	1,794,972	4.1%

[표 3-4] 전북자치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 전북자치도 시군별 외국인 현황은 전주시(17,694명), 군산시(13,374명), 익산시(11,229명) 등 3개 시에 전체 절반 이상(약 57%)이 집중되어 있음. 세 지역 모두 도내 주요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전주가 대학 수가 가장 많음에도 군산의 외국인 규모가 전주와 유사하다는

점은 군산의 산업단지와 향만 등 고용 기반이 외국인 유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 세 지역(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완주군, 정읍시, 김제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내륙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 규모가 낮은 편임. 전북 자치도 시 지역 평균 외국인 비율은 4.5%, 군 지역은 5.1%로 군 지역에서 외국인 비율이 시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이는 농축산업과 제조업 기반의 고용 구조 및 결혼이민 형태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외국인 비율은 완주군(6.5%)이 가장 높고, 고창군(6.0%), 정읍(5.6%), 김제(5.6%), 장수(5.5%), 진안(5.3%) 등 순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인구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 비율이 높아 농업 노동력, 결혼이민자, 외국인 가정 등 다양한 체류 유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전주시(2.7%)는 외국인 수가 가장 많으나 외국인 비율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군산시(5.0%)는 전북 평균(4.1%)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여 두 지역 간 외국인 인구의 절대 규모와 비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 전북자치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3년 11월 기준)

시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sup>3)</sup>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합계
전체	470,250	180,072	206,329	410,972	667,527	234,506	289,886	2,459,542
비율	19.1%	7.3%	8.4%	16.7%	27.1%	9.5%	11.8%	100%
전북(명)	13,505	5,872	9,799	2,781	20,842	7,118	13,885	73,802
비율	18.3%	8.0%	13.3%	3.8%	28.2%	9.6%	18.8%	100%
충북(명)	22,259	5,808	5,506	13,320	24,418	7,237	11,275	89,823
비율	24.8%	6.5%	6.1%	14.8%	27.2%	8.1%	12.6%	100%
전남(명)	25,625	6,603	4,399	2,955	22,911	7,626	16,610	86,729
비율	29.5%	7.6%	5.1%	3.4%	26.4%	8.8%	19.2%	100%
강원(명)	7,192	3,994	5,885	2,600	13,469	5,014	8,702	46,856
비율	15.3%	8.5%	12.6%	5.5%	28.7%	10.7%	18.6%	100%

[표 3-5] 전북자치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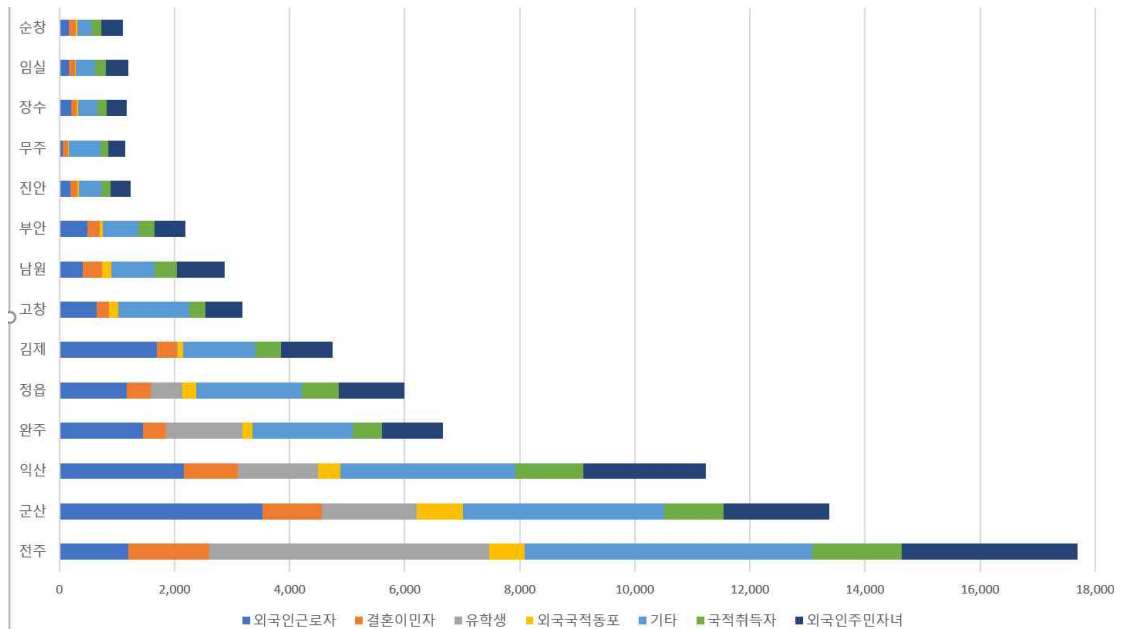
3) 기타외국인의 경우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전북자치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을 보면 기타외국인이 20,842명(28.2%)로 가장 많고, 외국인 주민 자녀 13,885명(18.8%), 외국인 근로자 13,505명(18.3%) 순으로 나타났음. 그다음으로는 유학생 9,799(13.3%), 한국 국적 취득자 7,118명(9.6%), 결혼이민자 5,782명(8.0%)이며,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 2,781명(3.8%)로 가장 낮았음.
-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전국 11.8%, 전북 18.8%)와 유학생(전국 8.4%, 전북 13.3%)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국적동포 비율(전국 16.7%, 전북 3.8%)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음.
-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비교해 보면 충북과 전남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충북 24.8%, 전남 29.5%)이 높은 반면 전북과 강원외의 경우 유학생 비율(전북 13.3%, 강원 12.6%)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더불어 외국인 주민 자녀의 경우에도 4개 지역 모두 전국(11.8%)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중심에서 점차 교육·정주형 외국인주민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시군별 유형별 현황(2024년 11월 기준)<sup>4)</sup>

시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전주	1,192	1,405	4,877	609	4,996	1,560	3,055
군산	3,531	1,035	1,642	808	3,494	1,029	1,835
익산	2,158	944	1,391	383	3,045	1,188	2,120
완주	1,445	403	1,331	173	1,743	513	1,062
정읍	1,166	424	540	241	1,847	636	1,137
김제	1,696	342	13	98	1,264	442	895
고창	645	222	1	154	1,229	281	645
남원	404	342	1	150	757	383	837
부안	482	216	1	52	622	284	528
진안	189	126	-	25	388	156	358
무주	64	90	-	17	547	127	294
장수	206	98	-	24	334	166	340
임실	160	109	-	19	339	176	398
순창	167	116	-	28	237	177	381

[표 3-6]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시군별 유형별 현황



[그림 3-2]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시군별 유형별 추이

4) 전북도청제출자료(전북자치도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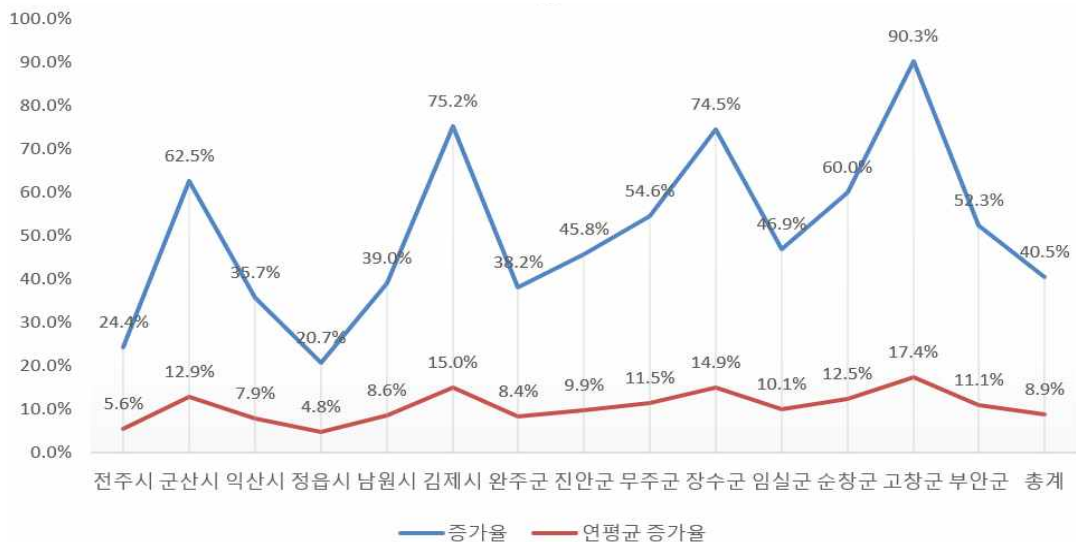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을 보면 유학생은 전주시(4,877명), 익산시(1,391명), 군산시(1,642명), 완주군(1,331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주요 대학이 위치한 교육 중심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군산시(3,531명), 익산시(2,158명), 완주군(1,455명), 김제시(1,696명), 정읍시(1,166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음. 이는 사업단지와 제조·가공업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력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결혼이민자는 전주시(1,405명), 군산시(1,035명), 익산시(944명) 등 도시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교육 인프라가 직접된 도시지역의 정주여건과 관련이 있음. 반면 농촌형 시군에서는 결혼이민자보다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주민 자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외국인주민 자녀는 전주시(3,055명), 익산시(2,120명), 군산시(1,835명), 남원시(837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이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증가에 따른 가족 동반 및 정주형 인구의 확대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유형별 구성은 시군의 산업·교육·정주 여건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 3.1.2. 전북 자치도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기준)<sup>5)</sup>

#### □ 전북자치도 등록외국인 최근 5년간 시군 현황<sup>6)</sup>

시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적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전주시	8,458	8,901	9,764	10,080	10,521	24.4%	5.6%
군산시	5,792	5,822	6,803	8,443	9,414	62.5%	12.9%
익산시	4,714	4,459	5,118	6,007	6,395	35.7%	7.9%
정읍시	2,731	2,480	2,700	3,066	3,295	20.7%	4.8%
남원시	953	888	962	1,180	1,325	39.0%	8.6%
김제시	1,876	1,742	2,173	2,685	3,286	75.2%	15.0%
완주군	3,226	3,009	3,589	4,155	4,458	38.2%	8.4%
진안군	336	322	408	471	490	45.8%	9.9%
무주군	216	192	292	327	334	54.6%	11.5%
장수군	231	324	373	370	403	74.5%	14.9%
임실군	290	273	405	405	426	46.9%	10.1%
순창군	295	313	388	415	472	60.0%	12.5%
고창군	894	814	1,102	1,517	1,701	90.3%	17.4%
부안군	809	792	956	1,032	1,232	52.3%	11.1%
총계	31,288	30,331	34,941	40,215	43,975	40.5%	8.9%

[표 3-7]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시군별 현황



[그림 3-3]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누적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5) 법무부 등록외국인: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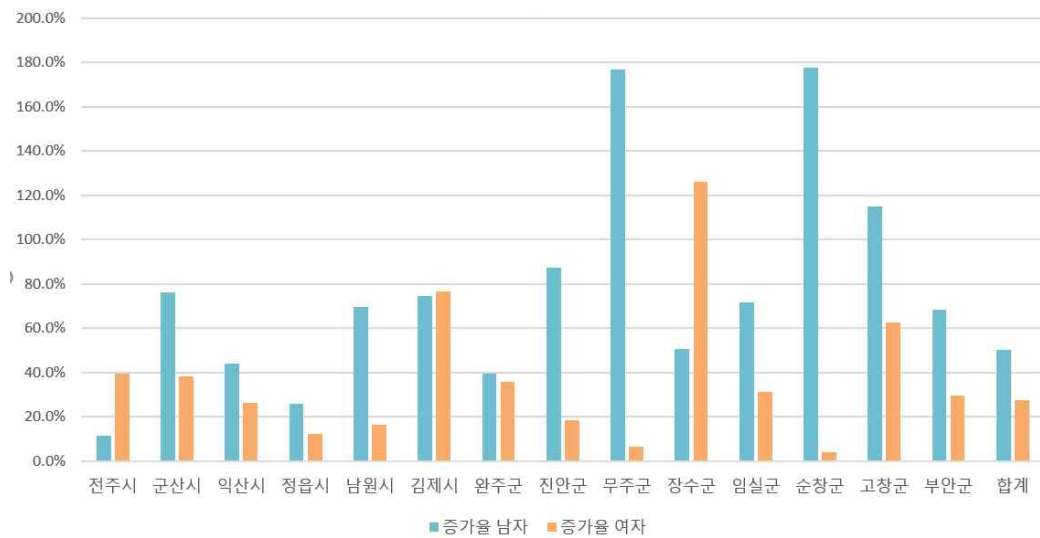
6) 국가통계포털 KOSIS 시스템 활용

-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등록외국인 수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음. 전북 누적 증가율은 40.5%,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음.
- 누적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창군(90.3%)이며 다음으로 김제시(75.2%), 장수군(74.5%), 군산시(62.5%), 순창군(60.0%)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읍시(20.7%)와 전주시(24.4%)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 연평균 증가율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고창군(17.4%)이 가장 높았으며 김제시(15.0%), 장수군(14.9%), 군산시(12.9%), 순창군(12.5%)이 뒤를 이었음. 정읍시(4.8%)는 5년 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지역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확인됨. 예를 들어 무주·진안·장수는 모두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농촌 중심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최근 5년간 등록외국인 증가율은 장수군(74.5%)로 가장 높았음. 이처럼 유사한 지역 내에서도 외국인 증가 폭에는 뚜렷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등록외국인 최근 5년간 시군별 성별 증감 추이

시군	누적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주시	11.6%	39.4%	2.8%	8.7%
군산시	76.2%	38.4%	15.2%	8.5%
익산시	44.1%	26.4%	9.6%	6.0%
정읍시	25.7%	12.3%	5.9%	2.9%
남원시	69.8%	16.4%	14.2%	3.9%
김제시	74.5%	76.8%	14.9%	15.3%
완주군	39.7%	35.9%	8.7%	8.0%
진안군	87.3%	18.3%	17.0%	4.3%
무주군	177.0%	6.5%	29.0%	1.6%
장수군	50.6%	126.0%	10.8%	22.6%
임실군	71.7%	31.1%	14.5%	7.0%
순창군	177.9%	4.0%	29.1%	1.0%
고창군	114.8%	62.7%	21.1%	12.9%
부안군	68.3%	29.4%	13.9%	6.7%
합계	50.1%	27.5%	10.7%	6.3%

[표 3-8]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성별 증감 추이



[그림 3-4]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최근 5년간 성별 증감 추이

- 최근 5년간 시군별 전체 등록외국인 누적 증가율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50.1%)이 여성(27.5%)보다 증가폭이 더 컸음.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도 남성(10.7%), 여성(6.3%)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다만, 장수군의 경우 여성 증가율(120.6%)이 남성(50.6%)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전주시 역시 여성 증가율이 더 높

있음. 반면, 김제시의 경우 남녀 증가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임. .

- 남성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순창군(177.9%), 무주군(177.0%), 고창군(114.8%)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여성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장수군(126.0%), 김제시(76.8%), 고창군(62.7%)으로 나타났음.
- 남녀 간 편차가 큰 지역은 무주(남 177.0%, 여 6.5%), 순창(남 177.9% 여 4.0%) 등은 최근 5년 간 외국인 등록 인구가 남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성별 증가율의 차이는 시군별 산업 구조나 인구 규모, 체류 형태, 외국인 주민 정책 등 지역 특성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체류자격별 분석을 통해서 그 구체적 요인을 살펴볼 예정임.

□ 전북자치도 국적별 등록 외국인 현황(2025년 6월 기준)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중국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타이	기타 <sup>7)</sup>	총합계
전국	289,000	252,352	218,166	81,083	65,577	64,936	58,862	55,955	54,562	44,687	34,755	1,559,975
비율	18.5%	16.2%	14.0%	5.2%	4.2%	4.2%	3.8%	3.6%	3.5%	2.9%	24.0%	100%
전북자치도	17,088	1,555	4,984	3,643	3,946	2,634	1,645	1,973	1,665	1,304	9,053	49,490
비율	35%	3%	10%	7%	8%	5%	3%	4%	3%	3%	18%	100%

[표 3-9] 전북자치도 국적별 등록 외국인 현황

-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의 주요 국적 분포를 보면, 베트남(35%), 중국(10%), 캄보디아(8%), 네팔(7%), 우즈베키스탄(5%) 순으로 나타났음
- 전국적으로도 베트남 국적자가 28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아, 전국 및 전북 모두 베트남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점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임.
- 특히 전북자치도의 베트남 국적 비율(35%)은 전국 평균(18.5%)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반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전국적으로 높은 비중(약 16%)을 차지하지만, 전북에서는 3% 수준으로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국적자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음.
- 이러한 차이는 전북지역의 산업 구조나 결혼이민 유형, 외국인 유학생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7) 기타에는 몽골, 미국, 일본,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약 127개국 국적 포함

□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국적 현황(2025년 6월 기준)

시군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중국	네팔	캄보디 아	우즈베 키스탄	인도네 시아	필리핀	미얀마	타이	기타
전주시	3,737	298	1,710	231	402	543	95	193	541	139	2,628
군산시	2,638	536	1,420	372	260	747	917	290	187	202	2,046
익산시	2,677	191	515	502	849	324	159	266	224	171	1,149
완주군	992	115	766	342	502	674	126	242	150	103	522
정읍시	1,540	144	177	504	240	44	111	183	176	179	533
김제시	1,013	61	87	638	398	198	81	206	184	141	666
고창군	1,156	55	52	344	780	25	22	42	66	170	429
남원시	558	87	91	193	149	19	2	65	29	47	510
부안군	766	27	60	123	78	17	91	28	49	31	197
무주군	718	8	13	81	30	3	1	81	1	31	93
진안군	349	9	21	84	32	8	0	303	17	12	67
장수군	365	8	24	83	83	20	0	37	8	34	62
순창군	253	9	23	70	75	5	26	25	20	12	123
임실군	326	7	25	76	68	7	14	12	13	32	28
총계	17,088	1,555	4,984	3,643	3,946	2,634	1,645	1,973	1,665	1,304	9,053

[표 3-10]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국적 현황

- 전북자치도 내 등록 외국인은 앞선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국적 비중이 가장 높으며(평균 35%)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1위를 차지함. 특히 정읍·김제·고창·부안·무주 등에서는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국적자로 나타남.
-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 국적자는 전주·군산·완주 등 도시지역 중심으로 분포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비중이 낮은 편임.
-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국적 비중은 도내 각 시·군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히 익산시의 캄보디아 국적자(849명) 비중은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창군(780명) 역시 베트남 다음으로 캄보디아 국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 내부에서도 지역별 외국인 구성의 차이는 뚜렷함. 군산시는 우즈베키스탄(747명)과 인도네시아(917명) 국적자의 비율이 도내 다른 시·군보다 높았고

진안군은 필리핀 국적자(303명) 비중이 베트남(349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요약하면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국적 구성은 전반적으로 베트남 국적 중심 구조를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특정 국적의 상대적 비중이 높게 분포하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함.

□ 전북자치도 체류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2025년 6월 기준)

	유학	일반 연구	구직	특정 활동	계절 근로	비전문취업	선원 취업	방문 동거	거주	동반	영주	결혼 이민자	기타
전국	190607	82483	20619	71284	49011	330391	20805	83278	64461	62674	213302	149710	220250
비율	12.2%	5.3%	1.3%	4.6%	3.1%	21.2%	1.3%	5.3%	4.1%	4.0%	13.7%	9.6%	14.1%
전북	7,464	3,633	955	1,668	6,518	12,338	378	2,602	1,307	1,804	2,233	5,174	3,416
비율	15.1%	7.3%	1.9%	3.4%	13.2%	24.9%	0.8%	5.3%	2.6%	3.6%	4.5%	10.5%	6.9%

[표 3-11] 전북자치도 체류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

- 전북자치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이 12,33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4.9%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유학(D-2)이 7,464명(15.1%), 계절근로(E-8)은 6,518명(13.2%), 결혼이민자(F-6) 5,174명(10.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원취업(E-10)은 378명(0.8%)로 가장 낮게 비중을 보였음.
- 전국과 비교해보면 전북자치도는 계절근로(전국 3.1%, 전북자치도 13.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유학(전국 12.2%, 전북자치도 15.1%), 일반연구(전국 5.3%, 전북자치도 7.3%), 비전문취업(전국 21.2%, 전북 24.9%), 결혼이민자(전국 9.6%, 전북자치도 10.5%) 등도 전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에 영주(F-5)와 거주(F-2) 자격은 각각 13.7%, 4.1%로 전국이 전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북자치도의 등록외국인 구조가 단기·비전문 취업 중심형에 가깝고 장기체류·정주형 체류자격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지역 산업 구조와 외국인 인력 수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체류자격 현황(2025년 6월 기준)

	유학	일반 연구	구직	특정 활동	계절 근로	비전문취업	선원 취업	방문 동거	거주	동반	영주	결혼 이민자	기타
고창군	3	0	0	69	1,907	599	0	70	70	92	58	174	99
군산시	1,689	505	181	504	118	2,851	308	445	159	251	580	906	1,118
김제시	16	3	15	222	385	1,592	1	176	360	341	104	333	125
남원시	7	2	1	49	519	376	0	141	64	55	109	280	147
무주군	0	0	0	6	826	76	0	39	4	1	25	74	9
부안군	4	0	3	26	266	563	69	108	72	41	47	170	98
순창군	2	1	0	17	226	165	0	48	29	18	37	87	11
완주군	934	562	72	172	175	1,549	0	213	67	125	122	377	166
익산시	1,057	674	90	234	402	2,149	0	388	77	197	384	879	496
임실군	0	0	0	12	226	178	0	53	17	7	20	89	6
장수군	0	0	1	18	325	186	0	52	8	9	27	87	11
전주시	3,583	1,559	514	160	12	723	0	618	230	518	534	1,214	666
정읍시	168	327	78	160	611	1,178	0	209	143	139	156	407	255
진안군	1	0	0	19	520	153	0	42	7	10	30	97	23

[표 3-12]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체류자격 현황을 보면 유학 및 일반연구 체류자는 전주시(3,583명), 군산시(1,689명), 익산시(1,057명), 완주군(934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주요 도내 대학(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농수산대 등)이 위치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계절근로체류자의 경우 고창군(1,097명)이 가장 많고 무주군(826명), 정읍시(611명), 진안군(520명) 순으로 나타났음. 주로 농업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계절적 노동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전문취업(E-9) 체류자는 군산시(2,851명), 익산시(2,149명), 완주군(1,549명),

김제시(1,595명) 등 산업 비중이 있는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음.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전주시(1,241명), 군산시(906명), 익산시(879명) 등 도시형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반면 농촌형 시군에서는 결혼이민자보다 계절근로(E-8)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북자치도의 등록 외국인 구조가 지역의 산업·교육 인구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음을 시사함. 도시형 지역은 유학생·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주형 체류자격, 농촌형 지역은 계절근로 중심의 단기취업형 체류자격, 산업형 지역은 비전문취업 중심 체류자격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2025년 6월 기준)

시군	0세-9세	10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66,257	64,895	476,932	457,266	244,152	157,684	76,782	16,007
비율	4.2%	4.2%	30.6%	29.3%	15.7%	10.1%	4.9%	1.0%
전북자치도	1,104	1,333	19,002	16,426	6,869	3,152	1,337	267
비율	2.2%	2.7%	38.4%	33.2%	13.9%	6.4%	2.7%	0.5%

[표 3-13]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

- 전북자치도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19,002명(38.4%)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16,426명(33.2%), 40대 6,869명(13.9%) 순으로 나타남. 전체연령 중 20~40대가 85.5%를 차지해 특정 연령대에 뚜렷한 집중도를 보임.
-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20대~40대 비중(전국 75.6%, 전북 85.5%)이 전북에서 더 높았으며 특히 20대(전국 30.6%, 전북자치도 38.4%)와 30대(전국 29.3%, 전북자치도 33.2%)에서 차이가 큼. 반면에 50세 비율(전국 10.1%, 전북자치도 6.4%)로 전국보다 낮음. 이는 전북의 외국인 인구가 생산가능연령층(20대~4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연령분포는 앞서 살펴본 체류자격별 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20대~40대 비중이 높은 것은 주로 유학생,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등 경제활동 또는 학업 목적의 단기·중기 체류자격 외국인이 많기 때문임. 즉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인구구조는 청년·근로·학업 중심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외국인 연령 현황(2025년 6월 기준)

시군	0세-9세	10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주시	366	490	5,615	2,293	807	602	283	61
군산시	205	394	3,578	3,127	1,256	701	274	80
익산시	139	164	3,054	2,115	818	450	239	48
완주군	81	105	2,205	1,419	420	210	85	9
정읍시	78	67	1,240	1,419	634	268	106	19
김제시	119	44	1,102	1,617	551	153	76	11
고창군	35	19	548	1,523	848	120	41	7
남원시	28	21	433	644	333	212	70	9
부안군	23	12	379	641	250	107	49	6
무주군	0	5	182	416	349	91	11	6
진안군	5	3	164	445	200	57	26	2
장수군	9	3	215	253	152	62	27	3
순창군	12	6	147	250	122	64	37	3
임실군	4	0	140	264	129	55	13	3

[표 3-14]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외국인 연령 현황

- 전북자치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연령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대부분 시군에서 70~8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전주시(53.4%), 군산시(43.5%), 익산시(48.6%), 완주군(46.0) 등에서 청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도내 주요 대학과 산업단지가 위치한 교육·산업 중심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반면, 고창군(20대 34.1%, 30대 36.4%), 무주군(20대 39.2%, 30대 36.1%), 진안군(20대 39.2%, 30대 35.7%) 등 농촌 지역에서도 20~3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계절근로 등 단기취업목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됨. 40대 이상 인구 비중은 대부분 시군에서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1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음.
- 종합하자면 시군별 연령분포는 지역의 산업·교육·농업 구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대학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도시형 지역은 유학생과 청년 근로자 중심의 젊은 연령 구조인 반면, 고창, 무주, 진안 등 농촌형 지역은 계절근로 중심의 단기취업형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즉 전북의 외국인 인구는 지역의 산업 및 교육 여건에 따라 청년층 중심 구조가 시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3.2. 전북 자치도 다문화 학생 및 가구 현황 및 특징

3.2.1. 2025년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현황 및 특징<sup>8)</sup>

## □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현황(2025년 기준)

구분	합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전체학생수 (초·중·고)	다문화 학생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국	202,208	136,592 (67.6%)	12,740 (6.3%)	52,876 (26.1%)	5,024,845	4.0%
전북자치도	9,244	8,320 (90%)	363 (4%)	561 (6%)	172,765	5.4%

[표 3-15]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현황

- 2025년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수는 9,244명으로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8,320명(90%), 중도입국 363명(4%), 외국인 가정 561명(6%)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중·고 학생 172,765명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4%로 전국 평균 4.0%보다 높은 수준임.
- 구성비를 보면 전북의 다문화 학생 중 국내출생 학생 비중이 90%로 매우 높아 대부분이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한 국제결혼가정 2세대 중심 구조임을 알 수 있음. 전국 평균에 비해 중도입국 학생 비율(전국 6.3%, 전북 4.0%)이 낮고 외국인 가정 학생 비율(전국 26.1%, 전북 6%)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전북의 다문화 학생은 ‘국내출생 중심의 안정적 학령기 구성’이라는 특징을 보임.

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활용(2025년 4월 기준)

□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학급별 현황

시도	학제	학생 수(명)	비율
전국	초등학교	116,601	57.7%
전국	중학교	51,172	25.3%
전국	고등학교	33,622	16.6%
전북	초등학교	4,874	52.7%
전북	중학교	2,469	26.7%
전북	고등학교	1,901	20.6%

[표 3-16] 전북자치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

- 2025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은 총 9,244명으로, 초등학교 4,874명(52.7%), 중학교 2,469명(26.7%), 고등학교 1,901명(20.6%)으로 구성되어 있음. 초등학교 비중이 가장 높지만, 중·고등학교 비율도 적지 않아 다문화 학생의 분포가 초등 중심에서 중·고등 단계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특히 고등학교 비율(20.6%)은 전국 평균(16.6%)보다 4.0%p가 높아,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이 상대적으로 학업을 더 오래 지속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전북 내 다문화가정이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1세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진입한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는 초등학생 비율이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학교 25.3%, 고등학교 16.6%로 여전히 초등 중심의 구조가 뚜렷함. 반면 전북자치도는 초등학교 비율이 전국보다 5.0%p 낮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비율이 각각 1.4%p, 4.0%p 높음. 즉, 전북의 다문화 학생 구조는 전국 평균보다 학령 후반부(중·고등)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양상을 보임.

### □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학생 현황

시군	합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전체학생수 (초·중·고)	다문화 학생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주시	1,902	1,630	87	185	73,603	2.6%
익산시	1,389	1,266	54	69	26,360	5.3%
군산시	1,154	954	75	125	27,044	4.3%
정읍시	805	734	35	36	8,864	9.1%
완주군	675	617	26	32	8,572	7.9%
김제시	629	552	25	52	6,036	10.4%
남원시	624	568	31	25	6,548	9.5%
고창군	469	441	12	16	4,329	10.8%
부안군	364	351	5	8	3,445	10.6%
순창군	266	263	-	3	1,964	13.5%
임실군	257	254	-	3	1,410	18.2%
진안군	248	244	1	3	1,507	16.5%
장수군	245	236	5	4	1,431	17.1%
무주군	217	210	7	-	1,652	13.1%
소계	9,244	8,320	363	561	172,765	100%

[표 3-17]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학생 현황

-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은 전주·군산·익산·정읍 등 주요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네 지역에만 전체 다문화 학생의 절반 이상(약 52%)이 분포하였음. 전주시 1,902명(21%), 군산시 1,154명(12%), 익산시 1,389명(15%), 정읍시 805명(9%)으로, 도시권이 규모 면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임실(18.2%)·장수(17.1%)·진안(16.5%)·무주(13.1%) 등 농촌 시군에서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평균 15% 이상으로 나타나 도시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음. 또한 정읍(9.1%)·김제(10.4%)·남원(9.5%) 역시 도농복합 지역으로 전북 평균(5.4%)을 크게 상회하며 두 자릿수 비율에 근접하였음.
- 이는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학교 유지와 학급 구성의 핵심 인구층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전북자치도 부모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현황(2024년 기준)<sup>9)</sup>

국적	전국		전북	
	학생수(명)	비율	학생수(명)	비율
베트남	61,333	31.6%	4,106	45.6%
중국	49,287	25.4%	1,510	16.8%
필리핀	16,805	8.7%	1,142	12.7%
캄보디아	7,867	4.1%	750	8.3%
일본	7,391	3.8%	369	4.1%
기타	6,157	3.2%	217	2.4%
한국계 중국	11,227	5.8%	200	2.2%
몽골	4,610	2.4%	185	2.1%
중앙아시아	7,662	4.0%	155	1.7%
태국	2,855	1.5%	134	1.5%
미국	2,106	1.1%	47	0.5%
중동	1,206	0.6%	46	0.5%
러시아	3,548	1.8%	43	0.5%
유럽	1,351	0.7%	32	0.4%
대만	1,048	0.5%	28	0.3%
인도네시아	776	0.4%	18	0.2%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한국계)	7,690	4.0%	18	0.2%
아프리카	895	0.5%	10	0.1%

[표 3-18] 전북자치도 부모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현황

-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의 부모 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 출신(4,106명, 45.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1,516명, 16.8%), 필리핀(1,142명, 12.7%), 캄보디아(750명, 8.3%), 일본(369명, 4.1%) 순으로 나타남.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이 총 6,150명으로 전체의 약 69.5%를 차지하여,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 구성에서 동남아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줌. 그 뒤를 이어 동북아시아(중국·한국계 중국·일본) 출신이 2,085명(22.6%)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미국·유럽 등)은 10% 미만 수준으로 제한적임.
-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역시 베트남(31.6%)과 중국(25.4%)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전북자치도는 이들 두 국적의 합계 비율이 62.4%로 전국 평균(57.0%)보다 높고, 특히 베트남 비중이 전국 대비 14.0%p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전국에서는 동북아(중국·한국계 중국·일본)가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지만, 전북자치도는 동북아 비중이 20%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9)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등교육통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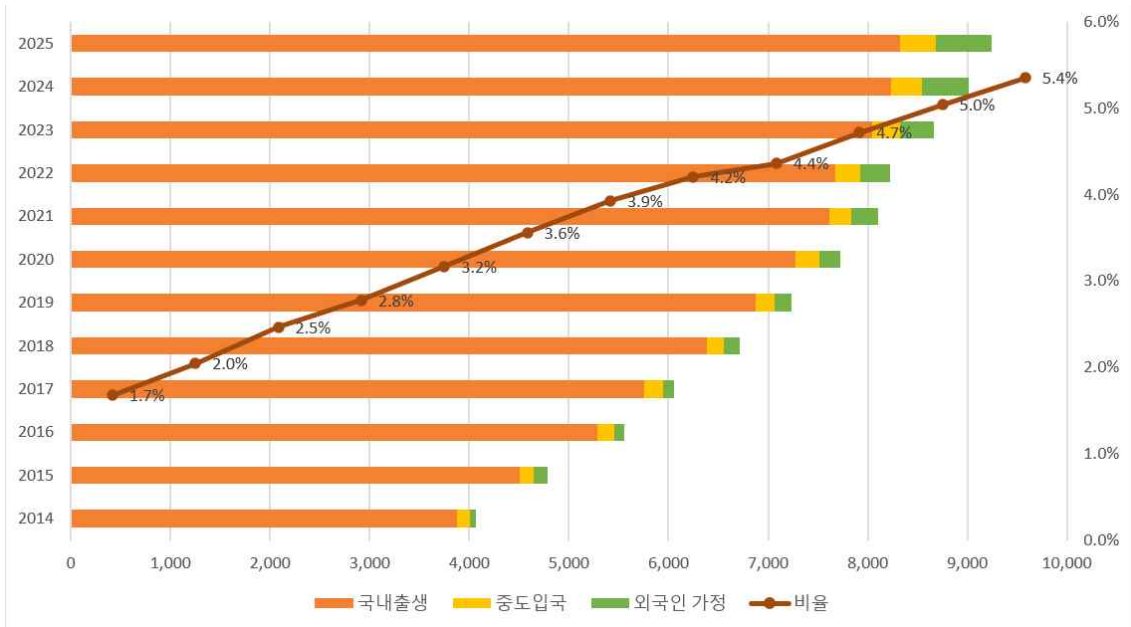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4-2025)

구분	연도별	합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전체학생수 (초중고)	외국인학생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북	2014	4,066	3,876	126	64	242,474	1.7%
	2015	4,790	4,509	140	141	234,225	2.0%
	2016	5,560	5,284	176	100	225,267	2.5%
	2017	6,056	5,760	187	109	217,835	2.8%
	2018	6,718	6,385	170	163	211,967	3.2%
	2019	7,230	6,876	190	164	203,148	3.6%
	2020	7,720	7,273	239	208	196,364	3.9%
	2021	8,105	7,613	218	274	192,793	4.2%
	2022	8,228	7,676	248	304	188,639	4.4%
	2023	8,664	8,041	279	344	183,616	4.7%
	2024	9,010	8,237	304	469	178,795	5.0%
2025	9,244	8,320	363	561	172,765	5.4%	
전국	2014	67,806	57,498	5,602	4,706	6,955,021	1.0%
	2015	82,536	68,099	6,261	8,176	6,789,696	1.2%
	2016	99,186	79,134	7,418	12,634	6,606,524	1.5%
	2017	109,387	89,314	7,792	12,281	6,440,327	1.7%
	2018	122,212	98,263	8,320	15,629	6,281,469	1.9%
	2019	137,225	108,069	8,697	20,459	6,111,567	2.2%
	2020	147,378	113,774	9,151	24,453	5,987,097	2.5%
	2021	160,058	122,095	9,427	28,536	5,920,026	2.7%
	2022	168,645	126,029	9,938	32,678	5,852,545	2.9%
	2023	181,178	129,910	10,896	40,372	5,764,040	3.1%
	2024	193,814	134,817	11,987	47,010	5,131,218	3.8%
2025	202,208	136,592	12,740	52,876	5,024,845	4.0%	

[표 3-19] 전북자치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4-2025)

-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은 2014년 4,066명에서 2025년 9,24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42,474명에서 172,765명으로 약 29%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1.7%에서 5.4%로 5배 이상 상승하였음.
- 이는 전국 평균(1.0% → 4.0%)보다 빠른 증가세로,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율(3.7%p 상승)이 전국 평균(3.0%p 상승)을 상회하였음.
- 유형별로 보면,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학생은 2014년 3,876명에서 2025년

8,320명으로 약 114% 증가하였으며, 중도입국 학생은 126명에서 363명으로 188% 증가하였음. 외국인가정 학생은 64명에서 561명으로 약 8.8배(781%) 증가하였음. 즉, 국내출생 학생이 다문화 학생 증가의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외국인 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5] 전북자치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변동 추이(2014-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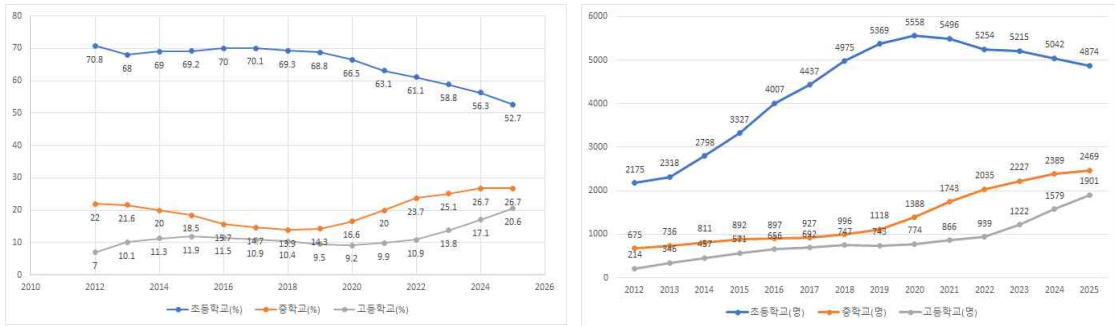
- [그림 3-4]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 수와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막대그래프 내 구성을 보면 국내출생 학생(주황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중도입국 학생(노란색)과 외국인가정 학생(녹색)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 구성이 단일 유형 중심에서 다변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임.
- 이러한 변화는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세 속에서 다문화 학생이 학교 인구 구성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줌.

### □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학교급별 연도별 추이

연도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2012	2,175	675	214
2013	2,318	736	346
2014	2,798	811	457
2015	3,327	892	571
2016	4,007	897	656
2017	4,437	927	692
2018	4,975	996	747
2019	5,369	1,118	743
2020	5,558	1,388	774
2021	5,496	1,743	866
2022	5,254	2,035	939
2023	5,215	2,227	1,222
2024	5,042	2,389	1,579
2025	4,874	2,469	1,901

[표 3-20]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학교급별 연도별 현황

- 전북자치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은 2012년 초등학교 2,175명, 중학교 675명, 고등학교 214명에서 2025년에는 각각 4,874명, 2,469명, 1,901명으로 확대되었음.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초등학생은 약 2.2배, 중학생은 약 3.6배, 고등학생은 약 8.8배 증가하였음. 특히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년이 상위로 이동한 세대 이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즉, 2010년대 초반 초등학생으로 등록되었던 다문화 학생들이 2020년대 들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전반적인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6] 전북자치도 다문화 학생 학교급별 연도별 추이

- [그림 3-5]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을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비율과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 것임. 그래프(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초등학교 비율은 2012년 70.8%에서 2025년 52.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중학교는 22.0%에서 26.7%, 고등학교는 7.2%에서 20.6%로 크게 증가 하였음.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 집중되었던 다문화 학생 분포가 점차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규모 추이(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020년을 전후로 초등학교 증가세가 둔화 되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음. 즉, 전북의 다문화 학생 구성은 학령 초기를 중심으로 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등 이후 학령대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음.

3.2.2. 전북자치도 다문화 가구<sup>10)</sup> 현황 및 특징

## □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 현황(2024년 기준)

시군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가구원)	다문화가구 (내국인 출생)	다문화가구 (귀화·인지)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구 (7타)
전주시	3,569	10,523	7,228	1,634	1,386	275
군산시	2,362	6,793	4,353	1,110	1,071	259
익산시	2,472	7,294	4,873	1,246	975	200
정읍시	1,216	3,800	2,539	662	457	142
남원시	863	2,728	1,908	400	340	80
김제시	922	3,032	2,088	462	358	124
완주군	1,059	3,421	2,354	538	416	113
진안군	325	1,110	784	167	117	42
무주군	267	887	638	142	83	24
장수군	296	1,054	759	169	98	28
임실군	329	1,130	829	184	91	26
순창군	347	1,146	828	188	105	25
고창군	610	2,091	1,516	295	220	60
부안군	565	1,843	1,282	302	210	49
합계	15,202	46,852	31,979	7,499	5,927	1,447

[표 3-21]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 현황(2024년 기준)

-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가구는 총 15,202가구, 전체 가구원은 46,85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구원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내국인 출생(자녀)이 31,979명으로 전체 가구원의 약 6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이는 결혼이민자 5,927명(12.7%)이나 귀화자 7,499명(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사회가 결혼이민자 유입 중심의 초기 단계를 지나 2세 자녀 양육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가족 형성 및 정착 완성기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함.

10) 다문화 가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인지 포함) 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이러한 다문화 가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가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학생이 성장하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기반과 양육 환경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임.

-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시(3,569가구), 익산시(2,472가구), 군산시(2,362가구) 등 3개 시 지역에 전체 다문화 가구의 과반인 55.3%가 집중되어 있어 도시 중심의 거주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반면, 무주군(267가구), 장수군(296가구), 진안군(325가구) 등 산악권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구 규모가 작게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함.

### □ 전북자치도 및 유사 지역 연도별 다문화 출생 비중 추이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4.5	4.8	5.2	5.5	5.9	6.0	5.5	5.0	5.3	5.6
전북자치도	6.2	6.9	6.6	7.7	8.1	7.7	6.7	5.5	6.6	6.8
강원자치도	4.8	4.7	4.8	5.2	5.3	5.5	5.3	4.5	4.7	4.9
충청북도	4.9	5.3	5.5	5.9	6.6	6.7	6.2	5.4	5.2	5.8
전라남도	6.6	6.5	7.5	6.9	7.8	7.9	7.6	6.8	6.3	6.8

[표 3-22] 전북자치도 및 유사 지역 연도별 다문화 출생 비중 추이(2015-2024)

-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다문화 출생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모든 연도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다문화 출생비중은 5.6%인 반면 전북은 6.8%로 1.2%p 더 높게 나타났음. 이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다문화 가구가 지역 출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출생 비중은 오히려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점임.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출생 비중은 2019년 8.1%까지 치솟았다가 2024년 6.8%로 조정되었으나 10년 전 대비 0.6%p 증가하였음. 이는 저출생이 심화 될수록 전북 내 신생아 중 다문화자녀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와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역학 관계가 확인됨.
-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북의 다문화 기여도는 최상위권에 해당함. 전남과 전북자치도의 경우 6.8%로 비교 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다문화 출생 비중을 기록함. 이는 농촌 비중이 높은 호남권 지역에서 다문화 가구가 인구 재생산의 핵심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충북은 2015년 4.9%에서 2024년 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북(6.8%)보다 낮았으며 강원자치도는 4.8%에서 4.9%로 정체되어 있어 전북자치도와 다른 양상을 보임.

□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출생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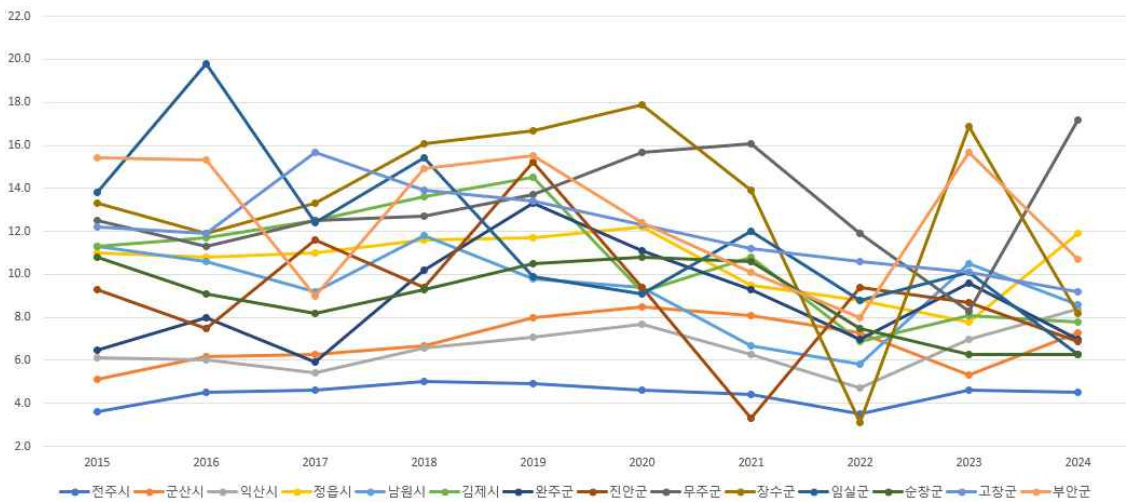
시군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주시	3.6	4.5	4.6	5.0	4.9	4.6	4.4	3.5	4.6	4.5
군산시	5.1	6.2	6.3	6.7	8.0	8.5	8.1	7.3	5.3	7.3
익산시	6.1	6.0	5.4	6.6	7.1	7.7	6.3	4.7	7.0	8.4
정읍시	11.0	10.8	11.0	11.6	11.7	12.2	9.5	8.8	7.8	11.9
남원시	11.3	10.6	9.2	11.8	9.8	9.4	6.7	5.8	10.5	8.6
김제시	11.3	11.7	12.5	13.6	14.5	9.2	10.8	6.9	8.1	7.8
완주군	6.5	8.0	5.9	10.2	13.3	11.1	9.3	7.0	9.6	7.0
진안군	9.3	7.5	11.6	9.4	15.2	9.4	3.3	9.4	8.7	6.9
무주군	12.5	11.3	12.5	12.7	13.7	15.7	16.1	11.9	8.3	17.2
장수군	13.3	11.9	13.3	16.1	16.7	17.9	13.9	3.1	16.9	8.2
임실군	13.8	19.8	12.4	15.4	9.9	9.1	12.0	8.8	10.1	6.3
순창군	10.8	9.1	8.2	9.3	10.5	10.8	10.6	7.5	6.3	6.3
고창군	12.2	11.9	15.7	13.9	13.4	12.3	11.2	10.6	10.1	9.2
부안군	15.4	15.3	9.0	14.9	15.5	12.4	10.1	8.0	15.7	10.7

[표 3-23]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출생 비중 추이(2015-2024)

- 2024년 기준 시군별 다문화 출생 비중을 살펴보면 무주군이 17.2%로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무주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6명 중 1명 이상이 다문화 가정 자녀임을 의미함. 그 뒤를 이어 정읍시(11.9%)와 부안군(10.7%)이 10%대를 상회하며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군 단위 농촌 지역 및 도농 복합시에서 다문화 가구가 인구 재생산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 됨.
- 2025년 대비 2024년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무주군은 2015년 12.5%에서 2024년 17.2%로 4.7%p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또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등 도시 및 도농복합 지역은 소폭이지만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시 지역 내 다문화 가구의 정착이 안정화되면서 출

생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 상당수 농촌 지역은 2015년 대비 비중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감소세를 보였음. 특히 임실군은 2015년 13.8%에서 2024년 6.3%로 -7.5%p 급락하여 도내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하였으며 부안군 역시 15.4%에서 10.7%로 -4.7p 감소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짐.



[그림 3-7]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출생 비중 변화 추이(2015-2024)

- [그림 3-6]을 통해서 연도별 추이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변동성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 안정형(도시): 전주시(파란색 하단선)와 익산시(회색선) 등은 10년간 등락 없이 완만한 곡선 또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출생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전체 출생아 수 모수가 커서 다문화 출생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변동형(농촌): 반면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농촌 지역은 연도에 따라 그래프 꺾임(낙폭과 등폭)이 매우 크고 불규칙하게 나타남.
-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장수군은 16.9%에서 8.2%로 급락한 반면 무주군은 8.3%에서 17.2%로 급증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임. 이는 농촌지역의 전체 출생아 수가 워낙 적어 소수의 다문화 출생아 증감만으로도 전체 비중이 크게 출렁이는 인구 구조의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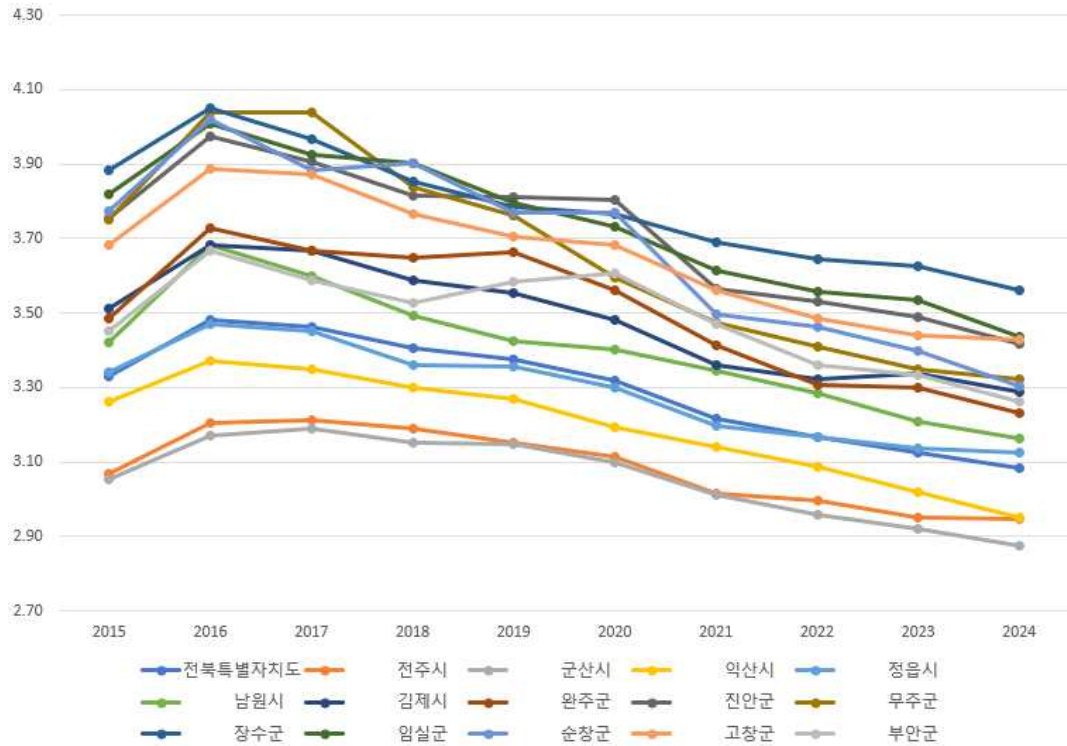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 시군별 일반 가구 및 다문화 가구 평균 가구원 수 현황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합계	전국
평균가구원수 (전체)	2.2	2.1	2.1	2	2	2	2.1	2	2	2	1.9	2	2	2	2.1	2.2
평균가구원수 (다문화)	2.95	2.88	2.95	3.13	3.16	3.29	3.23	3.42	3.32	3.56	3.43	3.30	3.43	3.26	3.08	2.82

[표 3-24] 전북자치도 시군별 일반 가구 및 다문화 가구 평균 가구원 수 비교

-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으로 전국 평균 2.2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특히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등 도시지역은 2.2명 수준을 유지하나 임실군(1.9명)을 비롯하여 진안·무주·장수·순창·부안 등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2.0명으로 나타남. 이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가구 규모 축소 및 인구 소멸 현상이 심화 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전북자치도 다문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08명으로 전체 평균(2.1명)보다 약 1명 가까이 많으며 전국 다문화 평균(2.82명)보다도 높은 수준임. 이는 전북의 다문화 가구 일반 가구 대비 견고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함.
- 가장 주목할 점은 도시와 농촌의 역설적 격차임. 일반 가구는 농촌으로 갈수록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다문화 가구는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도시지역인 전주시(2.95명), 군산시(2.88명) 등은 3명 미만으로 핵가족화 경향을 보였음. 장수군(3.56명)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창군(3.43명), 임실군(3.43명), 진안군(3.42명) 등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가구원 수를 기록함. 이러한 통계는 농촌 지역 다문화 가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다자녀 양육, 3세대 동거 등의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 평균 가구원 수 연도별 추이



[그림 3-8]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 평균 가구원 수 연도별 추이(2015-2024)

- [그림 3-7]은 전북자치도 시군별 다문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임. 추이를 살펴보면 전북자치도 내 모든 시군에서 다문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일제히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이는 다문화 가구 역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저출생 및 핵가족화 흐름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2016년-2017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가구원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도시(하위 그룹)와 농촌(상위 그룹) 간의 규모 차이는 10년간 뚜렷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농촌형(상위 그룹):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등은 2016년경 약 4.0명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였으나 2024년 시점에도 여전히 3.4명~3.5명 내외를 유지하며 그래프 상단에 위치함. 이는 농촌 지역이 여전히 대가족 형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도시형(하위 그룹): 반면 군산시(최하단)와 익산시는 2015년 초기부터 3명 초반대에서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특히 전주시(주황색 선)와 군산시는 2024년 기준 3.0명 선이 붕괴 된 2.9명대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핵가족화 양상을 보임.
- 시군별 감소 기울기를 비교할 때 장수,임실 등 상위 그룹(농촌)은 3.9명에서 3.4명대로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한 반면, 전주, 군산 등 하위 그룹(도시)은 3.0명대 초반에서 2.8명~2.9명대로 완만하게 감소하여 지역별로 핵가족화 진행 속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4.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 정책 동향



## 4.1. 외국인 주민 정책 환경과 동향

### 4.1.1. 외국인 주민 정책 환경

#### □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22년 10월 21일에 제정되어 2023년 12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조례가 일괄 개정되고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을 시작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 도내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북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기도 함.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2023년 3월 31일에 제정하고 2023년 12월 8일에 개정함. 이후 2025년 3월 7일에 일부개정하고 시행함.
  - 조례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임.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 조례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3)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민

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7) 외국인주민 통계,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는 1)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의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3) 외국인주민 생활 편의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보육·교육 등,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7) 외국인주민의 권익·인권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 또한, 조례는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를 두어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2025년 3월 7일에 신설됨.
- 도정발전에 공로한 외국인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유공단체 격려,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2024년 11월 1일 제정되고 시행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함. 기본계획의 항목은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3)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도에 소재하는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통합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인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함.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2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조례가 일괄 개정되고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을 시작함.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는 아니지만, 외국인농어촌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는 외국인농어촌근로자를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지칭하며, 농어촌인력의 한 범주로 다루고 있음.
-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총 11개의 항목 중 다음의 두 항목이 외국인농어촌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임. 8) 외국인농어촌근로자 도입 활성화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해당함.
- 제9조(외국인농어촌근로자 지원)에서는 도지사가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1)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관련 일자리 연계, 교육 및 실습, 2) 외국인근로자 숙소, 이동 교통비 지원,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 문서 번역 및 통역, 5) 외국인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함.
- 제10조(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 대책 수립)에서는 도지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계약 위반과 자업장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9월 19일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하여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sup>11)</sup>
  - 급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방안, 인권 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로 본회의에 통과한 상태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조사 등을 규정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안을 담았음.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는 전담인력 배치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와 이행 여부, 근로환경, 고용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함.

####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대외국제소통국의 외국인국제정책과 중 외국인지원팀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을 전담하고 있음. 외국인지원팀은 외국인 지원업무를 주로 관장하며, 주무관 2명과 팀장 1명으로 구성됨.



[그림 4-1]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조직도

11) 윤홍식,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통과.” 전민일보 2025년 9월 19일자 기사 참고.

- 외국인지원팀의 주요 업무는 주무관 2명이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담당하고 있음.

담당자	담당 업무
외국인지원팀장	외국인 지원업무
주무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관리</li> <li>◦ 재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li> <li>◦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리</li> <li>◦ 외국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li> <li>◦ 외국인 지원 법인·단체 관리 및 지원</li> <li>◦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표창(공무원, 민간인)</li> <li>◦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관리</li> <li>◦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관리</li> <li>◦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관리</li> <li>◦ 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li> <li>◦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위원회 운영</li> <li>◦ 국회·도의회 요구자료, 업무보고, 성과관리 업무</li> </ul>
주무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추천제 운영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li> <li>◦ 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추천제 운영</li> <li>◦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사업 운영</li> <li>◦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li> <li>◦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업무</li> <li>◦ 외국인 현황 및 통계 관리(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법무부 등록외국인)</li> <li>◦ 팀 주간·월중 업무 등 일반 서무 및 예산 서무</li> </ul>

[표 4-1] 외국인지원팀 업무분장

- 외국인지원팀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려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고려인 등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 도민과 외국인의 참여 확산,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충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정착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함.
  - 외국인 정착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 생활 적응,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민과 외국인 주민의 화합과 교류의 장 조성 등이 이루어짐.
  - 외국인 교육지원 사업(전북 외국인 포털 운영, 외국인 주민통합 시민교육, 외국인 한글 한마당), 외국인 활동지원 사업(전북 세계인 축제,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외국인 유학생 농촌 생활 체험)을 추진함.
  - 교류협력실의 외국인교류팀에서 팀장 1명, 대리 1명, 주임 2명이 관련 업무를 전담함.

- 2024년 5월 개소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초로 개소한 외국인 정착지원 거점기관임.
  - 2024년 2월 고용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4월 임시 개소한 이후 2024년 5월 3일 정식으로 개소함. 2024년의 운영평가는 A를 받음.
  -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 한국어와 직무교육 운영,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운영, 보이스피싱 등 각종 교육사업, 베트남어/미얀마어 통역 지원, 산업안전체험 교육 운영, 건강(한의·치과진료 등) 관련 교육 및 행사 기획과 운영 등을 수행함.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직원은 매니저(현재 공석), 주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9년부터 전주와 익산에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체류 허가, 고용 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 서비스를 통합 처리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이 행정 업무 처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는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통역사가,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는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우즈벡) 통역사가 배치되어 외국인 주민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외국인 주민 지원 여건<sup>12)</sup>

- 2025년에 신규로 추진하기 시작한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는 외국인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14개 시군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가족 및 일자리센터 등에 외국인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해 외국인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도비 112백만원(20%), 시군비 448백만원(80%) 총 56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함.
- 시군 외국인 지원센터는 일상생활 상담, 한국어, 직무역량 강화 교육, 행정서비스

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통해 제공 받은 외국인국제정책과의 내부자료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함

통역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함.

시군	운영기관(부서)	시군	운영기관(부서)
전주	가족센터(여성가족과)	진안	로컬JOB센터(농촌활력과)
군산	산단 복합문화센터 (인구대응담당관)	무주	가족센터(인구활력과)
익산	가족센터(여성가족과)	장수	-
정읍	가족센터(총무과)	임실	가족센터(다문화교류과)
남원	가족센터(여성가족과)	순창	가족센터(주민복지과)
김제	일자리지원센터(경제진흥과)	고창	가족센터(인재양성과)
완주	가족센터(인구가족과)	부안	가족센터(교육청소년과)

[표 4-2] 전북자치도 시군별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기관 현황

- 가족, 여성, 인구, 경제, 농촌활력, 주민복지, 인재양성, 교육청소년 등 14개 시군의 외국인주민 지원 담당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주민은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함.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

## □ 외국인 주민 정책 연구 수행 동향

- 2005년 개원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그리다”라는 미션과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이라는 비전 하에 조직의 역동성 제고, 미래 연구기능 강화, 도(시·군) 정책 선도, 연구사업 품질 제고, 연구환경 혁신을 목표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연구 싱크탱크임.
-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전북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방안」(2010), 「전북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2014),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2022),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3),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4)가 진행된 바 있음.<sup>13)</sup>
  - 2023년에 이루어진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글로벌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 이민자 유입,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 지원,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 존중 및 소통에 기반한 지역 통합, 외국인의 인간다운

13)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 검색으로 찾은 결과임

삶을 위한 인권 강화,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함.

- 이중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로는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005),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2019),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방안 연구」(2020)가 있음.
- 전북연구원 이외에 외국인 주민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연구자 개인적으로, 혹은 연구단체에 의한 용역 수행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KCI)에서 “전북 외국인 정책”으로 검색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실태 및 정책과제-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박신규, 2017)가 나옴.
  - 결혼이주여성에 관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정책 방안 연구-전북자치도지역 기관별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고은미 외, 2008)가 있음.
- 2024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전북 외국인 주민 실태 및 필요인력 수요조사」를 추진해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전북 외국인 주민 현황 및 산업과 대학 구조 분석, 외국인 주민 실태 및 산업체별 필요인력 수요조사, 수요 기반 맞춤형 외국인 정책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정책 방향으로는 1) 전북형 광역 비자제도(안) 운영, 2)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단 운영, 3) 전북 웰컴 키트(전북사랑키트) 지원, 4) 다국어 산업안전교육, 5) 전북특별자치도 ‘이민자 주간’ 운영, 6) 평생교육원 이민자 이해 과정 운영, 7) 이민자 대상 취창업 교육 운영 등을 제안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

## □ 외국인 주민 지원 시민사회단체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지원 시민사회단체는 총 23개로 나타남.<sup>14)</sup> 주로

14) 2022년 3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자료에서 외국인,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의 검색어를 활용해 찾은 자료와 김주영(2022), “전북자치도지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변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1): 29-82. 논문을 참고해 정리함

민간 단체를 집계하였으며, 특정 종교의 단체도 포함함.

지역	단체명	설립년도	운영주체	주요활동
전주 (10)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1998 (2002)	개신교(대한예수교장 로회 전북·전주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6월부터 중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활동</li> <li>• 노동, 인권 상담</li> <li>• 의료서비스 지원</li> </ul>
	전북이주사목센터	2008 (민간단체 등록 연도)	천주교전주교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보호와 가정문제 상담 및 보호 쉼터 제공</li> <li>• 이주여성과 자녀의 교육, 사회문화 적응, 의료 및 법률 지원</li> <li>•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인권교육 연구 및 연대</li> </ul>
	(사)착한벗들	2012	불교 (참좋은우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민 사회정착 지원</li> <li>• 다문화이해 사업</li> <li>• 한국어교육</li> <li>• 2021년 9월부터 전주외국인노동자쉼터 위탁운영</li> </ul>
	글로벌인재교육원	2019 (민간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 주체자로서의 다문화감수성 역량 강화</li> </ul>
	중국어자원봉사회	2010 (민간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이주여성 및 유학생 권익 향상</li> </ul>
	다문화가정 한우리공동체 나눔	2009 (민간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 이주여성 후원금 지원 및 고충상담</li> <li>•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li> <li>• 저소득 및 소외 이주여성 재활 자립기반 구축 및 장학금 지원사업</li> </ul>
	국제결혼가족발전협의회	2009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li> <li>• 상담, 무료법률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li> <li>• 스포츠, 여가활동 지원 및 고향방문 추진 등</li> </ul>
	밝은사회전북전주여성클럽	2007 (민간 단체)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지원 사업</li> </ul>

4.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 현황 정책 동향

		등록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li> </ul>
	국제가정복지연합회	2007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지원사업</li> <li>•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세미나</li> <li>•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제교류행사 등</li> </ul>
	국제결혼가정문화센터	2006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한국어, 컴퓨터, 전통문화, 행복만들기 등 교육사업</li> <li>• 결혼이민자 자녀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및 한국문화탐방 사업</li> <li>•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실 및 쉼터 운영</li> </ul>
군산 (3)	새만금이주민센터	2011	개신교 (새만금명성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li> <li>• 새만금이주민센터 해외지부 운영</li> <li>• 이주노동자 방법대원 활동</li> <li>• 쉼터 운영</li> </ul>
	군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쉼터	2012	종교 외 *대표: 기독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및 의료지원</li> <li>• 한국어 교육</li> <li>• 운전면허 취득 지원</li> <li>• 문화활동 지원</li> </ul>
	오식도외국인지원센터	2012	종교 (기쁨나눔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li> <li>• 인도네시아에 한국어 교육 센터 운영</li> <li>• 상담, 의료지원, 쉼터 운영</li> </ul>
익산 (2)	성요셉노동자의집	1983	종교(천주교 전주교구 이주사목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지원</li> <li>• 노동자 인권 상담 및 행정 소송 지원</li> <li>• 영성 활동(미사, 전례)</li> <li>• 이주민 쉼터 운영</li> </ul>
	갈릴리마을	2009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li> <li>•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사업</li> </ul>
완주 (2)	완주다문화공동체보물섬	2018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li> </ul>
	맘스 완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7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li> <li>• 결혼이주여성</li> </ul>

		등록 연도		한국문화체험 • 결혼이주여성가족 문화체험 및 상담
고창 (2)	다솜의 집	2010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위한 교육과 활동
	참사랑국제가정센터	2006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 • 이주여성과 가족의 문제예방과 상담사업
김제 (1)	다문화가정복지연합회	2009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 결혼이주여성 한글, 한국문화교육, 예절교육 • 다문화가정 상담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스포츠, 여가활동 지원 및 기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 일반
정읍 (1)	정읍참사랑여성이민자센터	2007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문제 상담 •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침해 구제사업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부안 (1)	다문화학교 다솜	2009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 다문화가정 무료결혼식 지원 •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무주 (1)	무주결혼이민가정 사랑나눔회	2007 (민간 단체 등록 연도)	개인	• 결혼이민자 인권, 복지, 교육,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의 권익보호사업 • 이주여성 가정을 위한 문제해결 및 가족교육과 상담활동

[표 4-3] 전북자치도지역 이주민 지원 민간단체 현황

\*출처: 김주영, 2022, “전북자치도지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변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1): 49-82. 59쪽과 각주4)의 자료를 종합 정리

- 23개 단체 중 18개 단체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 대부분은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결혼이주여성 자녀 교육, 일상생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주민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산업 이주노동자, 계절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활동은 이를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가톨릭 전주교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비교적 체계적인 활동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밖에 여러 지역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 4.1.2.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sup>15)</sup>

##### □ 2021~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변화

- 2021~2022년: 외국인주민 대상별 맞춤형 정책 시행, 그러나 다문화가족 중심
  - 2021년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음. 외국인주민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립, 복지, 건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과 진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다문화가족이 주요 대상이었음.
  - 당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 외국인 주민 자녀의 성장환경이 미비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을 시행함.
- 2023년: 중앙정부와의 협업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 강조
  - 2023년에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족 이외의 외국인주민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비자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요정책으로 설정함.
  -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우수인재(F-2-R) 유입을 강화하고자 지자체가 추천하고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임.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인 K-point E-7-4 시행에 따라 이 비자로 변경할 때 시, 도지사에게 추천을 받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 다문화가족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대상의 지원 사업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가족 형성으로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과 달리 일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정주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2024년: 외국인 근로자의 다변화와 유학생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2023년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일과 생활을 위한 지원, 유학생의 직무인턴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등이 이루어짐.

15)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제4차(2023~2027년)에 이르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법무부에서 제시한 2020~2025년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보고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통해 제공 받은 외국인국제정책과의 내부자료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함.

-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관련 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함.
- 2023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정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 이후 지역특화형 비자 외에도 유학생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인턴십 등을 통해 탐색되고 있음.

□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지역 정착과 정주를 향하여

- 2025년에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구성이 정책 여건으로 제시됨. 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 낮은 출생률, 외국인 주민의 급격한 증가, 높은 다문화 출생 비중 등이 외국인 주민 정책의 환경으로 나타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주목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함. 출입국과 이민정책이 산업수요와 지역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 유치-정착-통합의 단계별 정책 수요의 증대를 또 다른 정책 여건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新 출입국·이민정책 주도와 지역기반 이민정책 선도,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제2의 고향 마련, 사회통합과 외국인 역량 배양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의 세 가지로 제시됨.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륜
계	77	100%	40,465	23,714	△41.4%
1. 경 제	13	16.9%	8,892	10,589	19.1%
2. 안 전					
3. 통 합	58	75.3%	29,707	10,457	△64.8%
4. 인 권	2	2.6%	1,866	2,665	42.8%
5. 협 력 / 인 프 라	4	5.1%		3	100%

[표 4-4]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와 예산

\*출처: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458쪽

- 총 과제수는 77개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3개,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58개,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2개, [협력/인프라] 글로벌

별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됨.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사업

-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시행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교육 강화,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공공기관 유학생 직무인턴 지원, 지역기반비자승급지원금 지원, 인바운드창업지원사업
-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지역특화형비자사업운영,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원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사업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참여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다문화가정 안전체험캠프 운영
-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창구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 학업·진로·이중언어·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소통 증진: 국제외국인 분야 민간단체 지원,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MY 전북세계인축제, 다문화어울림축제개최, 외국인 주민 통합 시민교육, 외국인 유학생 농촌생활 체험 등 외국인 주민의 가족생활, 기타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 역량 배양: 전북 외국인 포털 운영: 외국인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외국인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외국인 상담 지원,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통합사업,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다문화정보공유프로그램 제작 지원, 외국인 한글한마당,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준법감수성 향상을 위한 안전모델 구축 등이 추진됨.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사업

-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기숙사 임차 지원),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사업
  -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위원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외국인주민 실태 및 필요 인력 조사
- 14개 시군에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야의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음
  - 지역 일자리 지원,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국제결혼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 다문화 가족 육아 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 가족 중심의 지원사업이 주를 이룸.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분야에서는 14개 시군이 사업의 주체로 드러나지 않음.

####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5년 사업: 외국인 정착 지원 중심

- 외국인 교육지원 사업
  - 도민,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북 외국인 포털 운영, 외국인 주민통합 시민교육, 외국인 한글 한마당 추진
  - 전북 외국인 포털은 생활정보, 자격증과 국적취득 교육자료, 상담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일, 외국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자료 번역과 검수를 하도록 하는 일 등을 포함함.
  - 외국인 주민통합 시민교육은 도민과 도내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대면 및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함.
  - 외국인 한글 한마당은 한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글의 의미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외국인 유학생 농촌 생활 체험을 추진함.
-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연간 2회 도내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 내 유학생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함. 도내 대학 유학생 담당 부서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대학이 유학생 정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함.
- 외국인 유학생 농촌 생활 체험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역 만족도,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전북형 지역 적응 프로그램임.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문화 경험과 교류, 농번기 일손 돕기로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 활동지원 사업
  - 2025 MY 전북 세계인 축제,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외국인 가사·육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
  - 2025 MY 전북 세계인 축제는 전통의상 패션쇼, 세계문화 체험 부스, 외국인 장기자랑 등 외국인 위주의 이벤트로 채워짐.
  -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은 외국인 비율이 30% 이상인 도내 외국인 동호회를 대상으로 자체 추진 행사를 지원함.
  - 외국인 가사·육아활동 지원사업은 유학생 및 졸업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 등 배우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신설 사업인 동 사업을 운영함. 교육 수려 시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2025년에는 센터 및 14개 시군에 배치된 상담 종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전문가 상담(법률, 노무, 행정), 의료 지원, 한국어 교육,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 운영,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 운영을 통한 센터 이용률 확대와 영향력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활동 및 정례 간담 추진을 통한 전북자치도 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 네트워크 고도화를 계획함.
  -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전북사랑키트(정착 길라잡이 책자, 생활필수품 제공)를 제공하며, 생활 속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이 외국인 근로자 권익증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서비스와 일상생활 영역에서 통역서비스를 지원함.

- 한국어 교육으로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 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을 운영함.
-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대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국인 대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함.
-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종사자의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전문가 대상으로 성과를 환류하는 방안을 모색함.

## 4.2. 전북도 다문화 교육정책 환경과 동향

### 4.2.1. 다문화 교육정책 환경

#### □ 다문화 학생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전북조례 제4992호, 2015. 5. 8 제정, 2023. 11. 10. 개정, 2024. 1. 18 시행)를 제정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동 조례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과 문화 다양성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전북자치도 차원의 핵심 교육 자치법규임.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북자치도교육감에게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속적 추진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5년마다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정책을 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지역 대학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정서·심리 상담과 학교 적응 프로그램 △진로 탐색 및 진학 지원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또한 다문화 학생의 정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국가 상위법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표기하고 있음.
  - 아울러 도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 아니라 민간 자원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 환경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문화 학생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조례는 다문화 학생 개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더불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교육문화의 확산,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그리고 전북 교육

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 5399호, 2023. 12. 8. 제정, 2024. 1. 18. 시행)를 제정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문화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중 교육 관련 내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학습권 보장과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주요 축으로 하고 있음.
  - 조례 제9조(도지사의 지원사업)에서 전북자치도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보육·교육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다문화 학생의 학령기 적응과 학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 기초학습 보충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육, 방과 후 학습지도, 진로탐색활동 지원 등을 포함함.
  - 또한 도는 교육청 및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학생의 심리·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전문가 및 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함.
  - 조례는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기초학력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또한 도지사는 교육청, 여성가족부,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부모-자녀 통합학습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음.
  - 조례는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교육의 주요 추진기관으로 지정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문화이해·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음. 이 조항은 도민 전체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조례는 전북자치도지사가 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사업, 언어발달교육, 부모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도는 2024년부터 다문화자녀 학습 및 한글교육 프로그램, 가족 문해교육, 진로진학 멘토링 등의 통합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음.

## 4.2.2.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 □ 2015~2025년 다문화교육 정책의 흐름

- 2015년 전북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2015년 처음 발표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은 지역 내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 맞춤형 멘토링과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 개별 학생의 학교 적응에 초점을 두고 실제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이 시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정과 중도입국 학생의 통합 지원과, 각 학교의 다문화교육담당자 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서비스 확대가 정책의 주된 흐름이었음.
  - 구체적으로는, 지역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학습지원과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을 핵심으로 추진함. 다문화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보충, 한국어·이중언어교육, 진로·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전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족·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학교 운영과 교원 연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모델을 확산함.
  - 궁극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시대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포용적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016년~2019년 초기 정책의 내실화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북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은 2015년의 기초 구축 단계를 지나 정책의 내실화와 현장 정착기로 자리매김함.
  - 우선, 연구학교와 정책학교의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별 다문화교육 실행 모델을 다양하게 실험함. 유·초·중·고교에 걸쳐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수업 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함. 각 연구학교는 다문화 학생의 언어·학습 지원뿐 아니라, 일반학생과 함께하는 통합 수업, 세계시민교육, 문화공유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자료를 축적함.
  - 또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가 본격화되어,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적·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및 상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연수에는 다문화이해 교육, 상담 실무, 다언어 학습자 지도법 등이 포함되어, 교원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이 시기에는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 체계도 강화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Wee센터와 다문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 학교 현장에서 발견되는 학습 부진, 문화 충돌, 언어 불안 등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함.
  - 아울러, 다문화교육이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지원 서비스가 강화됨. 교육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학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자녀 학습 지도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이러한 활동은 학부모가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학습과 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돕는 동시에, 학교-가정-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음.
  - 결과적으로 2016~2019년의 전북 다문화교육은 정책의 외형적 확산보다 질적 내실화, 현장 중심 실천, 연계 강화에 방점을 둔 시기였음. 다문화 학생의 학습·정서·가정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라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정책의 체계화와 지역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
    - 2020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은 정책의 체계화와 지역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시기였음. 이전까지 개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다문화교육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지역·가정이 연계되는 실질적 지원망을 형성하기 위해 ‘다꿈교육지원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다꿈교육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지원 기관이 아니라,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정책과 실행을 연결하는 거점 조직으로 자리 잡음. 이 센터는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거점학교, 지역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별로 상이한 다문화 학생 지원 요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인력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언어, 정서, 학업, 진로 등)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또한 2020년에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업 지속 지원이 강화되었음. 다꿈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방과후 한국어교육, 진로탐색 캠프,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었으며, 학교 내에서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보조교사와 다문화 언어강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

업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됨.

-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다문화 학생을 ‘특별한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방향을 확대한 것임. 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함. 교원 연수는 다문화 학생 지도법, 문화적 감수성 훈련, 학부모 및 학생 간 의사소통 전략 등을 포함해 교사들이 실제 수업과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학부모 대상 연수는 자녀 교육정보, 학교 제도 이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정-학교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함.
- 이와 함께 ‘다꿈어울림캠프’, 문화공감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확대함.
- 종합적으로 2020년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이 행정 중심에서 현장 중심, 개별 지원에서 통합 네트워크형 지원으로 전환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다꿈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지원망은 이후 2021년 이후의 지역 협력형 다문화교육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학생의 삶을 반영한 실질적 교육복지 모델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함.

● 2021~2024년 지원체계의 지역 단위로의 확장

- 맞춤형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북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은 2020년에 확립된 다꿈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족센터 간 협력망을 촘촘히 연결하는 단계로 발전함. 이 시기 정책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와 문화다양성 공존교육의 일상화였음.
- 우선, 지원체계의 지역 분권화와 인력풀 연계가 적극 추진됨. 도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다문화교육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학교에 맞춤 배치함. 이를 통해 한국어 강사, 이중언어 지도사, 상담 전문가 등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교에 지원될 수 있었음. 또한 지역센터가 보유한 프로그램(언어·진로·상담·가족지원 등)을 학교 단위로 공유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중간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실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됨. 학생층에서는 ‘다문화 이해 동아리’, ‘세계시민 프로젝트팀’, ‘이중언어 발표회’ 등 자율적 참여 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직접 다문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짐. 교사들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교원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을 수업에 통합하는 교수법을 연구함. 학부모 역시 지역센터와 연계된 ‘다문화 감수성 교육’, ‘자녀 학습 및 진로 지원 연

수’, ‘부모-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이해와 지지를 강화함.

- 이와 함께 문화다양성·공존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학교 문화 개선 사업이 본격화됨. 학교 내 다문화의 날, 세계문화축제, 다언어 인사 캠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다양성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유도함.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 인권·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SDGs) 요소를 포함시켜, 다문화교육이 한시적 사업이 아닌 보편적 가치교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상담·진로·심리 지원의 지역 연계 강화도 이루어짐. 교육청은 Wee센터, 학교사회복지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학생의 정서적 적응과 진로 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특히 청소년기 다문화 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로 캠프를 확대 운영함.
- 이 시기에는 다문화교육을 학교 안팎의 협력 생태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이 강화됨. 도교육청은 지역별 다문화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담당 부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함.
- 결과적으로 2021~2024년 전북의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함. 이는 다문화교육을 학교문화의 변화, 지역 공동체의 협력,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시킨 전환기로 평가할 수 있음.

● 2025년 맞춤형 지원체계의 고도화

- 2025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은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의 고도화 단계로 진입함. 이 시기의 정책은 개별 학생 중심의 학습·정서 지원을 넘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선, 지역 거점형 한국어학급 운영과 이중언어 지원 강화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됨.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밀집한 지역에 ‘거점형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중도입국학생·외국인학생·언어취약학생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 이 학급은 단순히 언어 학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사회·문화 적응과 학교생활 참여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공간으로 운영됨. 동시에 이중언어 능력을 학생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부모 나라 언어 유지와 활용을 장려하는 이중언어 수업 및 동아리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다문화 학생이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돕고 있음.
- 진로 및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의 다층적 확대가 이루어짐. 다문화 학생의 중·장기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캠프, 청소년 멘토링,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정례화되고, 대학·기업·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 다문화 학생, 대학생,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멘토-멘티 연계 구조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학업 지속 의지를 강화함.

- 학부모 대상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됨.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학습 지도법, 한국 교육제도 이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연수, 부모나라 언어를 활용한 가정 학습 지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됨. 이를 통해 가정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자녀 교육의 동반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고도화되어, 전북 다문화교육의 행정·정책·현장 연결 허브로 자리잡음. 센터는 학교 단위의 개별 지원 요청을 수집·분석하여 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총괄함. 2025년에는 특히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와 교육지원단이 신설 또는 강화되어, 정책 심의·평가·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의 피드백이 정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완성함.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다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 정착됨.
-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협력 모델이 정착되었음. 각 학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기관과 연계해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사회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생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함.
- 2025년 현재 다꿈학교(정책·지원·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5개 지역 거점형 한국어학급(초등학교 9개학급),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15개교, 다문화교육 정책유치원 7개원, 다꿈지원학교(유치원) 168개교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통해, 언어·문화·경제적 배경 등으로 지원이 미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이 포용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2025년의 전북 다문화교육은 단위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조적 지원에서 통합적 네트워크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음.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전북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참여·공존의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가고 있음.

## □ 다문화가족센터와의 연계 및 역할

### ● 다문화가족센터(또는 가족센터)

- 전북자치도지역의 다문화교육은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센터(또는 가족센터) 역시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에 있어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지역 다문화가족센터는 국가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며, 국비·도비·시·군비 등 다원적 재원을 통한 공공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전국 가족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본운영비, 사업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전북자치도 및 산하 시·군은 센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의 일부를 도비와 시·군비로 분담.
- 가족센터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 자리한 생활 밀착형 기관으로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는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 등 교육청의 직접 지원이 미치지 어려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작동함.

### ● 가족센터의 교육 관련 역할

- 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 창구로 활용됨.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학습지원, 다문화 학생 캠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대한 참여 모집, 홍보, 접수 안내를 담당함. 센터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의 공문이나 학교 안내문보다 센터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군에서 가족센터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가정의 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함.
- 가족센터는 교육공간이 부족한 시·군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장소로도 활용됨. 학교 기반이 아닌, 가족센터 내 강의실이나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어교실(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학습, 생활언어 교육 실시), 부모교육 프로그램(학부모 대상 자녀 학습지도 방법, 학교제도 이해 교육 등), 언어발달지원 사업(유아~초등 자녀 대상 언어능력 평가 및 맞춤형 교육 진행)
- 이처럼 가족센터는 학령기 이전 혹은 방과후 시간대 교육의 대체 공간으로 기능함. 이를 통해 학교-가정-센터를 잇는 다층적 교육 지원 체계가 형성되고 있음.

- 직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참여의 역할도 수행함. 전북여성가족재단 및 도 복지정책과는 정기적으로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함. 이 연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지원, 부모상담, 교육 제도 이해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룸.
- 가족센터 직원들이 다문화교육의 변화 방향이나 교육청 정책 흐름을 공유받아, 현장에서 교육 관련 상담과 연계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임. 이러한 연수는 센터 직원이 단순 복지 인력이 아니라, 교육-복지 통합 지원의 실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됨.
- 또한 통·번역 및 상담을 통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언어장벽,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가족센터는 통번역 인력을 배치해 학교 안내문 번역, 학부모 상담 동행,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지원을 수행함.
- 특히 입학, 진급, 학사행정, 진로상담 등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체계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함. 이와 더불어 생활정보 제공,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육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고 있음.
- 이와 함께 교육 관련 기능의 제도적 포함과 행정적 연계 강화 역할도 수행함. 전북도 복지부처에서 관리하는 가족센터 운영지침에는 “교육상담, 생활정보 제공, 방문상담”이 공식 기능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가족센터가 단순한 복지기관을 넘어 교육적 기능을 내포한 복합적 생활지원 기관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도 복지부처와 여성가족재단은 교육청과 협력해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 중이며, 시·군 단위에서는 센터-학교-교육지원청 간 협의체나 실무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런 구조 속에서 가족센터는 교육청 정책을 현장 단위에서 실행·보완하는 실질적 협력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다문화가족센터는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의 현장적 실현을 지원하는 생활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센터가 학교 밖 교육 생태계의 실질적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향후 과제로는 교육청과의 공식 협력 체계 강화, 프로그램 중복 최소화, 농촌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형 교육 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됨.

## 5.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 정책 진단 및 제언



## 5.1. 외국인 주민 정책 진단

### 5.1.1.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 □ 통합, 경제발전,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

- 2025년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기존의 정책이 다문화 가족 중심의 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줌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기조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의 행위자로 스스로를 명명하기도 하며, 이주를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는 차별화 되는 지점임
- 사회통합, 교육, 복지 중심이었던 정책과 사업은 경제, 노동 분야로 확장되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음. 또한, 취업과 유치뿐만 아니라 창업으로까지 고민을 확장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 정주 인구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나타남

#### □ 지자체 주도의 이민정책 추진 노력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지역의 주체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임
- 2023년부터 계절근로 확대나 농촌 인력지원과 같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부상함. 이때부터 광역이민 협력 거버넌스와 이주 연구 네트워크 참여로 행정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
- 2023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함. 지역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기획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지역특화형비자나 숙련기능인력의 확대가 사례임.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도지사가 추천,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됨<sup>16)</sup>
- 법무부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에 관한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함.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치,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함. 전북특별자치도를 새로운 이민정책의 시험대로 삼겠다는 의임<sup>17)</sup>

## □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보호의 강화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제정과 시행,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정책적 흐름을 보여줌
- 특히, 계절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필수적인 노동력인데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부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여 일부 민간 단체에서 추진해 온 분절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통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부족한 인력과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지원팀에는 팀장, 두 명의 주무관이 있음. 세 명의 인원이

16)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한 이후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법무부의 시범사업이 된 것이라고 전달하는 언론보도가 있음(전북도민일보, “지역특화형비자, 특별자치도 특례로 전북 전체로 확대 건의,” 권순재 기자, 2023.3.28.).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자체의 강한 의지가 중앙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른 기사에서는 2022년 7월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단체장 만남에서 김관영 지사가 비자발급권의 10% 정도를 광역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음(프레시안, “전북특별자치도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진심’인 지역으로,” 김대홍 기자, 2025.9.6.).

17) 세계일보, “전북도 ‘외국인·이민정책 시험대’로...법무부와 업무협약,” 김동욱 기자, 2023.10.30.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조례를 관리하거나 지역특화비자와 같은 굵직한 사업을 운영하고 14개 시군의 외국인 지원센터를 관리함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접 지원 사업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위탁운영 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 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민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기반 확충,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주어진 사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이상이 어려워 보임
- 협력이 가능한 민간단체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주력하여 다변화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관심이 저조한 환경 속에서 정책을 주도해야 하지만 인력과 추진체계에 제약이 나타남

### 5.1.2. 외국인 주민 대상별 정책

#### □ 다문화 가족: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추진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업에서도 사회통합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4개 시군 단위에서는 특히 그 존재감이 두드러짐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을 초기 적응과 정착 단계부터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 본인과 자녀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자립으로 이끈다는 방향성이 강하게 표출됨. 여기에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도 다수 추진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은 의사소통 지원과 생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연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됨.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시험과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문화, 예절 등을 배워 한국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가족 초청을 지원하거나 본국 방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명절 전후 친족 가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언어와 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개별 언어교육을 지원하거나 엄마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을 지원함
- 다문화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심리 상담, 진로 탐색, 학습 멘토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도서관 조성, 다문화 가족 안전체험캠프 운영, 육아지원금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도 함. 나아가 다문화 가족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음
-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자립을 위한 취업과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만 한정됨. 중요한 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자녀의 아버지로서 한국 남성은 사업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음
- 아버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자체는 진안군임. 자녀발달 단계별(영유아기, 청소년기)로 전문가를 초청해 아버지 교육 시행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내용임. 이마저도 남편으로서 한국 남성은 아내인 결혼이주여성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현실임

##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 가족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임. 특히 노동력으로서 이들을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의지가 있음
- 2025년에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눈에 띄게 등장하였음.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운영

을 지원함

-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등 도입뿐만 아니라 열악하다고 지적되어 온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계획도 있음.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함
-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 관련 상담이나 정착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체류 유형별 복지 기준을 설정하여 의료비와 건강 상담을 지원하기도 함
-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으로 숙식 제공, 상담 등을 지원함.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 생활과 지역사회 적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함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업체와 고용주에 관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의 쉼터 운영, 상담, 기타 행정 지원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식의 사업이 부재함

## □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정책 대상임. 사업의 수로 보면 가장 적지만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2023년부터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유학생과 같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됨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근로자 등을 도지사가 추천하여 장기 거주 비자(F-2-R, E-74R)를 발급하는 제도임
  - 유학생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업종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이나 배우자의 취업도 지역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분야로 한정되지만 가능하긴 함
  - 그러나 배우자의 취업을 단순 노무로 한정하는 아쉬움이 있음. 배우자 역시 유학생

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배우자의 취업을 단순 노무로 한정하는 것은 지역 인재의 양성을 저해하는 제약이 될 수 있음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것임. 유학비자(D2) 대상자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대학과 학과에서 정규 학위 취득 과정에 다니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생활에의 적응과 정착, 생활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비하면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장하여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있음. 이를 위해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비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도 함
  - 공공기관에서 유학생이 직무인턴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이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함
  - 외국인 유학생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농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취업 이후 이들의 가족생활 전반으로 관심이 확장되지 못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도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이들의 생애주기(결혼-출산-양육 등)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5.1.3. 외국인 주민 정책의 성과와 한계<sup>18)</sup>

#### □ 성과

-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에 필요한 이민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성과가 있음. 외국인 주민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18)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465쪽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와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에 분석을 추가함

- ‘유입-정착-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703명으로 전국 최다로 확보하고 추천한 성과가 있음
  - 2024년에 시행한 만족도 조사는 33개 기업, 23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기업은 75.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근로자 역시 61.6%가 만족한다고 답함
  - 세부적으로 근로자는 근무지, 업무, 복지, 급여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음. 근무성실성은 그 다음이었으며, 의사소통도 70%를 넘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2023년 4,600명, 2024년 4,7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8,500명으로 크게 증가함. 숙련기능인력의 광역지자체 추천제 추천 현황도 2023년 26명, 2024년 74명, 2025년 8월 284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양적으로 발생함
- 2024년 5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장과 생활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음. 2024년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성과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9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전북은 A를 받아 2위를 함
  - 평가의견으로는 전북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가 지역의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방식이 되었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인 기술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강조됨
- 농어촌에서 일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타남

## □ 한계

-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 모집에 한계를 보임. 정부의 외국인 고용제한(내국인 50%, 최대 20명)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쿼터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평가하고 있음
  - 2023년에는 400명, 2024년에는 323명,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87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고창, 부안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정읍(18명)과 김제(56명)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두드

리지지 않음<sup>19)</sup>

- 쿼터 달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의 졸업 후 삶에 관한 실질적인 질을 평가할 방법이 부재함. 쿼터 달성은 양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질적으로 특정 비자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주민의 분류별(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실태조사와 정책 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의 모색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관련된 조례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음. 면밀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 지역특화형 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가늠하고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전담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기숙사 건립, 도입 쿼터 확대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실제로 계절근로자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 주민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과 선주민은 단절되어 있음.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모든 분야에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선주민에 관한 언급이 현저히 부족함. 통합을 위한 문화교류 축제는 일회성이며, 외국인 주민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것이 주를 이룸
-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별로 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가 부재함. 상시적인 민관 협의체 구축을 통한 관련 의견 청취와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한 상황임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총괄적인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는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여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함. 민간단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외국인 주민 당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도 아님.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에 머무름.

19) 이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공받은 사업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함

## 5.2. 전북자치도 다문화 교육 정책 진단

### 5.2.1. 다문화 교육의 성과와 과제

-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북자치도 다문화교육은 ‘포용적 교육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장기 비전을 토대로, 학교-지역사회-가정을 잇는 협력적 지원 모델을 발전시켜 왔음.
  - 전북자치도는 이 기간 다문화 학생의 언어적·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맞춤형 언어교육·진로교육·상담 지원, 거점형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 거버넌스 체계화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동시에 지역 간 지원 편차, 인력과 예산의 한계, 가족·지역사회의 낮은 참여율과 같은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존재함.

#### □ 다문화 교육의 주요 성과

- 맞춤형 언어·학습 지원체계 구축
  - 2015년 이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와 언어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19년부터 거점형 한국어학급과 이중언어교육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
  - 거점형 한국어학급은 언어 수준이 낮거나 중도입국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단기간의 언어교육뿐 아니라 학교 적응·문화이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이중언어 활동 및 동아리 운영은 학생이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이중언어 발표회, 부모나라 언어 활용 학습 자료 제작, 가족 참여형 언어 교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되어, 학생의 언어·정체성 발달을 촉진함.
  -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방과후 수업, 튜터링, 학습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다문화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함.
  - 진로캠프 및 체험형 학습은 학생 개인의 흥미와 역량을 중심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업 체험, 대학 방문, 지역사회 탐방을 결합한 ‘진로 연계형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북의 다문화 학생 지원은 단순한 언어보충을 넘어, 개별 성장

과 진로 개발을 아우르는 포괄적 학습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함.

● 협력 기반의 강화 및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여, 다문화교육의 행정·현장·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함. 이 모델은 학교 단위의 개별적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청-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적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특징임.
- 우선, 다꿈교육지원센터는 각 학교의 현장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력풀 운영 시스템’을 가동함. 이를 통해 한국어강사,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등 필요한 인력을 학교별 상황에 따라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정서·진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함. 단순한 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센터는 학교의 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하며 문제 해결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 기능도 수행함.
- 또한, 센터는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원 범위를 학교 외부로 확장함. 이를 통해 학부모 상담, 통번역 서비스, 가족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가정 및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학생 지원이 학교 담장을 넘어 가정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 다문화교육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병행하여, 전북도교육청은 일부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중복사업을 조정하며, 예산 및 인력 배분의 효율화를 논의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임.
- 이러한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전북의 다문화교육은 학교 중심의 단편적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가 학생의 학습, 정서, 가족 적응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역 협력 기반의 교육복지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보임. 즉, 다문화교육이 더 이상 특정 부서나 학교의 과제가 아니라, 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유지·운영하는 지속가능한 공공 협력체제로 정착시키고자 함.

● 학생의 적응력·자아정체감·사회성 향상

- 전북자치도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 학생을 단순히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 이를 위해 정서·심리 지원체계의 전문화와 학생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구축됨.

- 먼저, Wee센터, 학교상담실, 다문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됨. 학교 단위에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생 적응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 체계화가 추진되었음.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상담,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학생의 불안·소외감·언어 스트레스 등을 조기에 발견함. 특히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학습 부진이나 교우관계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 시 학교 상담교사와 지역 Wee센터 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개입하는 연계 기반이 구축되어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됨. 다문화 청소년 선배나 지역 대학생, 교사, 시민 멘토 등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학업 상담을 지원하고, 문화 체험과 교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학생의 자존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이 '나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상호성의 배움 구조를 형성함.
  - 또한, 정책학교 및 지역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주간',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이중언어 발표회' 등 참여형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차이'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협동과 공감의 학교 문화를 실천적으로 경험함.
  -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다문화 학생은 학업·정서·사회적 측면에서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고, 자신의 배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자아정체감과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었음. 더 나아가, 일반학생과 교직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상호 존중과 포용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둠.
- **다문화교육 제도화 및 행정 거버넌스 발전**
- 전북자치도지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적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적·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개별 학교의 자율사업에서 벗어나, 정책-실행-평가-환류가 순환되는 공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됨.
  -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2015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가 있음. 이 조례는 전북 내 다문화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감이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더 이상 단기적 과제나 외부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

- 조례 제정 이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5년 단위의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연계적으로 시행함. 기본계획은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연도별 계획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사업과 평가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장기적 정책 방향성과 단기적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함.
- 아울러,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확립됨.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의 기획·평가·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지원단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 여기에 거점학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효과를 상호 검증하는 구조가 마련됨. 이러한 다층적 협력체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간 중복을 줄이는 데 기여함.
- 특히,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정책 실무의 중심 허브로 기능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을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피드백을 정착시킴.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피드백이 제도 개선과 다음 해 사업 설계로 연결되는 순환형 행정체계가 확대되는 중임.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보고된 언어 지원의 부족, 상담 인력의 수요, 문화이해교육의 한계 등은 센터를 통해 교육청 차원의 사업 조정으로 이어짐.
-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전북의 다문화교육이 더 이상 선택적이거나 보조적 사업이 아닌, 공교육의 필수 영역이자 장기 정책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즉, 전북자치도의 다문화교육은 법적 근거와 행정 시스템을 모두 갖춘 '정책 기반형 다문화교육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국적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됨.

● 문화다양성 존중과 포용적 학교문화 확산

- 전북자치도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단순히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원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교육문화 조성의 과정으로 확대되어 왔음. 이러한 방향은 다문화교육을 사회적 약자 지원에서 학교문화 혁신과 가치교육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정례적 연수가 확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교원이 다문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문화 감수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함. 연수 내용에는 다문화 교수법, 문화 간 소통 역량, 언어 다양성 이해, 인권·평화교육을 융합한 수업 설계 방법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가 다문화교육을 교과 내외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됨.

- 또한, 교육과정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됨. 다문화교육을 교양적 부가활동이 아니라 정규 교과와 연계한 학습 경험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사회·도덕 과목에서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국어·영어 과목에서는 다언어·다문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다양성의 의미를 학습하는 등, 교과 융합형 다문화교육 모델이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도입·확산되고 있음.
- 정책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의 자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학생자치회, 동아리, 학급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의 날’, ‘세계문화축제’, ‘다언어 인사 캠페인’, ‘문화공유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기획·운영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단순히 타문화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다양성을 실천하는 생활 속 다문화교육으로 발전시킴.
-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다수가 ‘다문화교육’을 특정 학생을 위한 별도 활동이 아니라 학교문화 전반의 가치 변화 운동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이 조성됨.
- 결과적으로 전국의 다문화교육은 학습지원 중심의 보조정책에서 벗어나, 학교문화의 구조적 변화와 가치 혁신을 견인하는 학교문화 혁신을 촉진하는 통합교육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음. 즉, 다문화교육이 개별 학생의 적응을 넘어서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교육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임.

## 5.2.2. 다문화교육의 과제

### □ 정책운영 상의 문제점과 과제

#### ● 지원의 지역별·학교별 불균형

- 전북자치도 내 다문화교육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조적 한계 중 하나는 ‘지원의 지역별·학교별 불균형’임. 이는 다문화 학생의 거주 분포, 지역 인프라, 학교 규모, 인력 배치 체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공간적·질적 격차의 문제로, 정책의 행정적 틀은 도 전역에 구축되었음에도 실제 교육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

- 우선,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학생은 전주, 익산, 완주 등 도시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이들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문화 학생 수도 많음.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한국어학급, 다문화 거점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다문화 담당교사 배치 등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이러한 도시권 학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이중언어 활동·진로 및 학습 멘토링·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공함.
  - 반면, 농촌·산간·도서 지역의 학교들은 구조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사가 비전문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발생함.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일반 교과교사가 임시로 언어지도를 담당하거나,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이 전문상담교사 대신 담임교사의 개인적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인적 자원의 편중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편차를 낳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학습 성취도 격차, 언어 능력 격차, 학교 적응력 격차로 누적될 위험이 있음. 실제로 도시권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 캠프, 언어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외곽지역 학생들은 이동거리·예산·정보 부족 등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됨. 이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과 통합적 성장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더욱이 행정 차원에서의 정책 기반은 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실행력은 지역 인프라와 인력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이중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즉, 다문화교육의 기본계획은 전북 전역을 포괄하지만, 사업의 실질적 집행은 도시 중심의 집중지원 체계에 머물러 있어, 결과적으로 정책의 공간적 불균형 (spatial imbalance)이 지속되는 양상임.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순회형 한국어교실 및 온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 구축, 농촌지역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단 운영, 도서·산간지역 대상 원격상담·멘토링 플랫폼 도입, 지역 인력 양성형 프로그램(예: 지역 거주 다문화 강사·통번역사 훈련) 등의 비중심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재조정 단계’로 진입해야 함을 제시함.
- 인력·예산의 제약과 프로그램 지속성 부족
    - 전북자치도 다문화교육 현장에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구조의 제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도내 이주배경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배치된 강사 수가 72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음. 이로 미루어 볼 때, 학생 수 증가 속도를 감당할 만큼의 인재 확보와 안정적 배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가 됨.

- 예산 측면에서도 다문화교육은 전체 교육청 예산 중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배정됨. 예를 들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는 다문화교육 항목에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교육 예산 규모 대비 제한적인 수준임을 보여 줌. 이는 다문화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심화하기 위한 예산 여력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 가능함.
- 이러한 인력·예산의 제약은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 약화로 이어짐.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단년도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방식은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들. 사업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이 줄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성이 큼.
- 더욱이 인력이 비정규 또는 시간제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면, 장기적 신뢰 관계 형성이나 연속 지원 구조 구축이 어렵고, 인력 교체 시 지원이 단절되거나 사업 시행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 이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 사업이 ‘프로젝트 중심 단기 사업’으로 인식되는 구조적 이유 중 하나임.
- 요컨대, 다문화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전용 예산 항목 확보, 상근 전문 인력 구조 정비, 장기 사업 설계 및 중복 없는 예산 배분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함.

● 학부모·가족의 낮은 참여와 정보 소외

- 전북자치도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체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참여 부족과 학부모의 정보 소외 문제는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됨. 다문화 학생의 학습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 성장에는 가정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언어·경제·문화적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가장 큰 요인은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임. 다문화가정의 상당수 학부모는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에서 발송하는 공지문, 상담 안내, 자녀 생활기록 통지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일부 학교에서는 번역본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이중언어 도우미를 활용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지역별·학교별 편차가 큼. 특히 외곽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역 인력이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부재하여 학부모가 학교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참여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함.

- 교육청과 학교의 행정문서, 학부모연수 자료, 온라인 공지 등이 여전히 대부분 한국어 단일언어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보의 벽’(information barrier)이 존재함. 결과적으로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녀 관련 상담, 방과후 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학부모가 정책의 수혜자임에도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발생함.
- 또한, 시간적·경제적 제약도 가족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 많은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학부모들은 비정규직·교대근무·영세자영업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학교 행사나 학부모 연수에 참석하기 어렵고, 평일 주간 시간대의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함.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주로 온라인 설명회나 주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정책에서 일부 해소 노력도 진행 중(예: 스마트폰 안내·영상 번역 등 실험적 사례)이나, 인터넷 접근성이나 디지털 활용능력의 격차로 인해 참여가 제한적인 디지털 소외 현상도 병존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학업 성취, 진로 선택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며, 교육과정과 가정의 연계성이 약화됨.
- 또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단기성과 비연속성도 문제로 지적됨. 교육청이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예: 부모교육, 가족캠프, 자녀 의사소통 교육 등)은 대부분 공모사업·행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1회성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학부모가 꾸준히 참여하며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거나, 자녀 교육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 가족학습공동체(Family Learning Community)’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일부 거점학교나 센터에서 정기 모임 형태의 가족학습 공동체를 시도했으나, 예산 및 담당 인력의 교체로 장기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남.
- 이러한 학부모의 참여 부족과 정보 단절은 학생의 학교 적응과 진로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면, 학생은 가정 내 학습·정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진로 상담이나 진학 준비 과정에서도 정보 격차를 경험하게 됨.
- 또한 가정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형성이 어렵고, 학생 지원에 필요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능해짐. 결국, 학부모의 정보 소외와 낮은 참여율은 단순히 가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교-가정 간 신뢰의 단절과 학생의 사회적 통합 지연이라는 교육적 문제로 확장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문서·공지의 다국어화, 이중언어 코디네이터·가정통역사 제도 정착, 야간·주말형 학부모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부모 소통

플랫폼 구축, 가족학습공동체의 장기적 지원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학교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가정과 학부모를 적극적 교육 주체로 통합하는 가족 참여형 다문화교육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 편차

-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구축한 다꿈교육지원센터-교육지원청-가족센터-지자체 협력체계는 형식적·제도적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의 내실화와 지속적 협력의 안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실행력과 협력의 질은 지역의 행정 역량, 인적 자원, 기관 간 관계성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조적 현실임.
- 먼저, 도시권 지역(전주·익산·완주 등)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협력과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지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지역대학, NGO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가 풍부함. 따라서 교육청 주관의 정기 협의회, 실무자 간담회, 공동 프로그램 기획회의 등이 정례화 되어 있으며,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다꿈교육지원센터가 한국어 및 진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가족센터는 학부모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를, Wee센터는 정서·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식의 기능별 협업 구조(functional collaboration)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함.
-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 예산과 민간 협력자원을 병행 활용하여 문화행사형 프로그램(다문화 축제, 세계시민의 날 등)이나 학생·학부모 통합형 프로그램(가족캠프, 공동학습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교·가정·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모델을 실현하고 있음.
- 반면, 농촌·소규모 지역에서는 협력 체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계나 공동 사업의 지속성은 취약한 편임. 이들 지역은 다문화 학생 수가 적고, 관련 기관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협력의 효율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가족센터가 읍·면 단위에만 위치하거나,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다문화업무 외에 다른 사무를 병행하는 등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이 협력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 의존도가 높아, 중앙 또는 도 단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에는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축소되면 다음 해 사업이 중단되는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됨. 결과적으로 기관 간 협력이 행정적 보고나 형식적 회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상호 연계보다는 ‘행정적 동원형 협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실정임.

- 더욱이, 제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 및 평가·피드백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됨. 예를 들어, 다꿈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나 학교 현장의 요구가 가족센터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동일한 대상에게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제공되는 등의 사업 간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각 기관이 개별 사업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협력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환류하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임.
- 전북자치도의 다문화교육 협력체계는 행정적으로는 안정된 틀을 갖추었지만, 현장의 실행력과 협력의 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음. 향후 과제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협력의 ‘형식적 존재’에서 ‘실질적 운영’으로의 전환, 즉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역 거버넌스 고도화임. 이를 통해서만 다문화교육이 행정적 정책 단위를 넘어 학교·가정·지역이 공동으로 성장하는 사회적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거버넌스 품질관리(standardization)’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지역별 협력의 운영 표준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② 정기적 평가·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며, ③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교육청의 2025년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거버넌스 사례 공유 및 성과관리 체계”를 충실히 마련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현장평가(연 1회) 외에도 정기 평가·피드백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포용적 문화와 실질적 통합의 과제

- 전북자치도 지역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포용적 문화 확산과 문화다양성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다양성의 생활화와 실질적 통합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 즉,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었으나, 학교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수준은 학교 유형, 지역, 교사 역량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을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에 반영하며, 학교 구성원의 문화 감수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아 왔음. 교원 연수를 정례화하고, 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캠페인, 다문화의 날, 세계시민주간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틀은 안정적으로 확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문화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함.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이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실 속에서는 여전히 학생 간 문화적 거리감, 언어 장벽, 소속감 결여가 지속되고 있음.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이 소수인 학교의 경우, 이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보다 ‘도와줘야 할 대상’, 혹은 ‘특별한 학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이 공식적인 지원이나 보호는 받지만, 정작 일상적인 교우관계나 학급 내 참여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상은 명시적 차별이 아닌 ‘비의도적 배제(silent exclusion)’로 나타나는 데, 이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포용만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에서 비롯됨.
- 또한 교원 연수와 인식 개선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이해도와 실천 수준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일부 교사는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통합하고 협동학습·문화교류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지만, 다른 교사들은 여전히 다문화교육을 부가적 업무나 행사성 활동으로 인식함. 그 결과,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교육문화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문화 학생이 속한 학교에 따라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다문화교육을 일관된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운영하기보다는, 담당 교사나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개별 학교 의존형 운영 구조’에서 기인함. 이와 같은 상황은 다문화교육이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학교문화 전반의 변화로는 확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줌.
-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전히 다문화 관련 행사는 1회성 체험 프로그램(예: 음식문화 체험, 전통의상 입기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학습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행사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진정한 문화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 학교 운영, 학급 문화 전반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스며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교과 수업에서는 국어·사회·도덕·예술 교과에 문화다양성 사례를 통합하고, 협동학습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언어·문화의 자산을 활용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며,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학생자치회·학부모회·교사연구회 등이 함께 ‘다문화 친화학교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교사 연수를 단발적 강의형에서 벗어나, 학교 단위의 장기 코칭형 문화감수성 연수로 전환하고, 학교 자체의 문화 다양성 진단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개선 상

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포용적 학교문화 확산 노력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분명한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 '행사 중심의 형식적 포용'에서 '생활문화 중심의 실질적 공존'으로의 전환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임.
- 앞으로의 과제는 다문화 학생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적 공동체로 학교를 재구성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다문화교육은 비로소 학교 안에서 '특별한 교육'이 아닌, 보편적 교육 가치로 자리 잡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 '다문화' 용어를 희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제언

- '다문화'라는 용어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타자와의 구별 짓기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보편적인 다양성, 또는 권리 기반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당사자가 '다문화'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 하에 안산시가 '다문화지원 본부'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바꾼 사례가 있음(주간경향 2021).
- 조례/ 규칙에서의 용어 교체 제안(안):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이란 표현을 '이주배경 주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표현, 다문화 정책을 '다양성·포용 정책' 또는 '상호문화 정책'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함.
- 이주 배경은 국적과 출신국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험·가정 언어·체류·학습 환경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책 목표를 지역 주민과의 동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차별 금지·동등 접근·참여 보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에서도 문화다양성을 다문화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간주하고 정책화하는 논의가 있음(김민경·윤아영 2021).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5.3. 전북자치도형 외국인 주민 다문화 교육정책 및 입법방향 제언

#### □ 전북자치도의 외국인·다문화 현황: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특성 규명

-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나, 증가 속도는 빠름
  - 2023년 11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수는 73,80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6만 명 중 약 4.2% 수준임. 같은 시점 전국 외국인 주민 비율이 4.8%임을 감안하면, 절대 규모와 상대 규모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낮지만, 전북은 2022

## 5.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학생 정책 진단 및 제언

년 대비 2023년 외국인 주민이 13.3%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큼.

- 특히 고창군, 익산시, 진안군,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등 농산어촌, 중소도시 시·군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전형적인 대도시 산업단지형이 아니라 농산어촌형 외국인·다문화 집적지라는 점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와의 가장 큰 차이임.

### ● 타 지자체(광역시·도교육청 등)의 다문화·이주배경 교육 조례의 최근 개정 동향

- 전국 시·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또는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형태로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들 조례는 공통적으로 다문화 및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 적응 지원,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함.
- 최근 5년 간의 개정 흐름을 분석하면, 다수의 교육청에서 해당 조례를 유지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이는 다문화·이주배경 교육 정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 교육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경기도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는 2025년 1월 17일 타법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며,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서울특별시	·2024년 5월 23일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영 등 개정 취지가 별도로 공지됨
인천광역시	·2024년 7월 15일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 내용을 조정함
부산광역시	·2024년 2월 21일 타법개정이 이뤄짐
대구광역시	·2024년 5월 20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함
경상북도	·2024년 9월 26일 일부개정이 이뤄짐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11월 10일 타법개정이 있었으며,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이후 추가 타법개정 표시도 확인됨)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 6월 28일 타법개정이 이뤄짐
대전광역시	·2023년 3월 3일 일부개정이 이뤄짐
울산광역시	·2022년 6월 23일 일부개정이 이뤄짐
충청북도	·2023년 11월 3일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연혁상 제목개정 등 이전 정비 이력도 있음
충청남도	·2022년 6월 30일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체계를 정비함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6월 2일 일부개정(시행 2023년 6월 11일)이 이뤄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는 2024년 7월 15일 일부개정됨
전라남도	·2022년 10월 13일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2025년 12월 9일 추가 일부개정 조

	례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최근까지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광주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정되어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대규모 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현행 조례 체계는 유지되고 있음

[표 5-1] 시도교육청별 최근 5년 개정 현황

- 최근 5년 간 개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상위 법령 정비에 따른 조례 개점임.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에 따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조정되면서 교육청 조례도 이에 맞춰 타법개정 또는 일부개정으로 이뤄짐.
  - 둘째,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화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례에 명시하거나,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짐.
  - 셋째, 지원 대상과 정책 내용의 점진적 확장임. 기존의 다문화가족 학생 중심 접근에서 언어·학습·정서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학생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 간의 광역교육청 조례 개정 동향은 다문화·이주배경 교육 정책이 각 교육청의 재량적 사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정책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다수의 교육청에서 반복적인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여전히 조례 명칭과 구조가 다문화교육 중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해외사례와 같이 이주배경 학생, 다양성, 포용, 교육 접근권이라는 관점으로 개념과 목적 조향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
  - 이러한 분석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이주배경 교육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할 때,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외국인 특화 마을, 특화 거리 조성 에 대한 정책과 긍정적 효과
    -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일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거나 상권과 커뮤니티를 형성한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화 마을 또는 특화 거리 정책이 추진됨.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 집거를 단순한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하는 주요 동인으로 바라봄.
    - (경기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안산시 원곡동 일대는 2009년 외국인 주민

이 밀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됨. 이는 외국인 중심 지역을 단순한 거주지로 방치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정책 공간으로 제도화한 사례로 꼽힘.

- 안산시 사례는 특구가 단발성 행사나 관광형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될 때 보다 365일 작동하는 생활 기반 플랫폼으로 설계될 때 효과가 더욱 큼을 시사함. 즉, 외국인 주민의 거주, 노동, 교육, 행정 접근, 생활 안전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구조가 필요함.
- 이를 입법 또는 조례화 하기 위해 특구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조례로 명시하고, 상인, 지역주민, 외국인 커뮤니티, 학교, 행정 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환경 관리, 치안, 상권 활성화, 교육 지원을 개별 사업이 아닌 통합관리 체계로 묶는 방식이 효과적임.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은 최근 외국인 주민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국가별 커뮤니티와 상권이 형성된 사실상의 다국적 집거지로 평가됨. 특히 조선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며,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이 지역 단위로 이뤄지고 있음.
- 영암군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2023년 삼호읍 일대를 중심으로 아시아 하모니 거리(외국인 주민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함. 이는 외국인 주민 밀집을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지역 현실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개소 등 정착 지원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며, 생활·행정·상담 기능을 강화함.
- 외국인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는 통·번역, 보건, 안전, 교육,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과제가 한 지점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분산된 행정 지원보다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고려인 마을은 해외 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집거 사례임. 광주광역시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담 조직과 지원센터, 문화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함.
- 고려인 마을 사례의 시사점은 정책의 지속성에 있음. 조례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담 조직과 행정 지원이 마련되고, 이후 문화·교육 인프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단기 사업 중심 정책과 뚜렷이 구별됨.
- 또한 문화행사와 공간 조성이 도시 브랜드 형성과 방문객 유입, 지역 활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줌. 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 정책

을 생업, 주거 안정, 교육 지원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함.

- 다문화 학생 비중은 전국 수준과 유사하나, 소규모 학교 및 농촌지역에 집중
  - 전국 초·중·고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3.5%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임. 전북자치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등 다문화 학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면 단위 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함.
  - 이는 수도권처럼 대규모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 보다는 학급·학교 단위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사 지원에 구조적 부담이 발생하는 형태가 두드러짐.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맞는 농산어촌형·지역소멸형 대응형 다문화·외국인 정책 모델이 필요함.
  - 요컨대 전북자치도 지역은 농산어촌 중심의 외국인 주민 증가, 시·군 간 이질적인 분포, 소규모 학교 중심의 다문화 교육 부담, 지역 소멸 문제와 결합된 인구구조 변화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와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임.
  - 이와 더불어 전북자치도 지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고등학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 분포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전북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중, 고등학교 학령기에 진입한 구조적 변화이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의 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교육·돌봄 허브’ 모델 수립
  - 전북의 다문화 학생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다문화 학교를 전제로 한 수도권·광역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교와 마을을 복합 허브로 농산어촌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거점 학교에는 방과후 한국어·모국어 보완 교육, 부모 대상 생활·노동·법률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온라인 연합 수업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도시와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야 함. 여기에는 비중심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순회형 한국어교실 및 온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 구축, 농촌지역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단 운영, 도서·산간지역 대상 원격상담·멘토링 플랫폼 도입, 지역 인력 양성형 프로그램(예: 지역 거주 다문화 강사·통번역사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농산어촌형 외국인 주민 정주지원 법제화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정주 및 지역공동체 지원 조례(가칭)」 제정, 단순 사회 통합 조례를 넘어서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주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 동반자의 주거, 의료, 교육, 돌봄까지 연계한 종합 정주 패키지를 조례로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귀농·귀촌과 연계한 농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임대 농지, 공공임대, 정주 수당 등)에 대한 제도화 수립 방안 모색도 필요함
  - 농업, 돌봄, 지역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정주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북 자치도형 ‘지역필수인력 양성·고용지원 조항’을 마련하고, 한국어·직업능력 교육을 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주 기간 연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함.
- 시·군별 외국인, 다문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 조항 신설
  - 도 조례에 전 시·군이 5년 단위 외국인 주민·이주배경 주민 통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문화 함. 도는 시·군 계획을 통합해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복과 누락 없는 정책 수립을 체계화 함.
  - 외국인 비율, 증가율, 농촌학교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중점 지원지역 지정 조항을 신설하여 지정지역에 대해 통번역 전문인력, 통합지원센터 설치, 교육·복지 연계 특별 보조금 지원 등 차등화된 지원 구조를 도 조례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인접 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교육·돌봄·노동 정책을 위해 광역-기초-인접 시·군 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교차 거주·통합·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특정 집단 지원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로의 접근

- 보편적인 정책 수립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는 방식 채택
  - 외국인 주민이나 이주민만을 따로 구분해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가 다양한 구성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그 목적과 달리, 이주민을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작 이주민의 목소리는 빠진 채 결과적으로 지역민과 이주민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양성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함. 이러한 인식과 관점을 입법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명확히 제안하는 것이 중요함.

- 조례에 답을 수 있는 기본 원칙 제안(안)

- (비차별과 평등한 접근): 모든 주민은 언어, 출신 국가, 인종 및 민족,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교육·행정·복지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외국인이라서 또는 단순히 다문화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에 ‘비차별 원칙’을 분명히 명시해야 함을 강조함.
- (참여 원칙):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 주민은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함. 외국인 주민 정책, 다문화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실제로 참여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둬.
- (보편 서비스는 기본,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 고려): 기본적인 행정·교육·복지서비스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되, 필요가 더 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이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통·번역 지원,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심리·정서 상담, 행정 절차 안내 등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추가 지원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주배경 주민 참여 기구 의무화

- 외국인 주민 정책 협의회나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위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주민 또는 이주배경 주민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임.
- 예산 편성 시,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 전용 참여예산 트랙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례로 지역 축제, 교육 프로그램,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참고문헌

- 김가람. 2023. “다문화 교육 정책으로서 ‘다꿈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어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국어문학』83.
- 김기영. 2017. “한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9(1).
- 김도원. 2025. “통계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MRTC Statistical Brief 2025-04.
- 김민경·윤아영.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기반으로.” 『문화정책논총』 35(2).
- 김주영. 2022. “전북자치도지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변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1): 49-82.
- 김효선 외. 2016.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 우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 박미경 외. 2023.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21』 14(2).
- 법무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2025.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2025.02.20.)
- 양경화. 2020. 「다꿈교육지원센터 확대설치 필요성 검토」. 전북교육정책연구 2020-011. 전북자치도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이주연 외. 2023.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북자치도 여성정책연구소.
- 임인선. 2025. “지역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비교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3).
- 주간경향. 2021. “빛바랜 선의, ‘다문화가정’ 용어를 넘어서.” (2021.09.08.)
- 전대욱. 2023.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맞춤형 정책의 추진.” 지방자치정책 브리프 no.166.
- 전희진·전아람. 2023.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전북자치도 여성정책 연구소.

-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테니즌십(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정연숙 외. 2021. “국내 다문화교육과 다문화대안학교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교육혁신연구』 31(1).
- 정희옥·박명아.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 최영미. 2021. “경기도 및 시군 외국인주민 조례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제240호, 경기여성가족재단.
- 최영준. 2018.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 『평생교육·HRD연구』, 14(2).
- 최준호 외. 2019. “전북자치도지역의 다문화 교육 및 활동 인식에 관한 실태 분석: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7(2).
- 행정안전부. 2022.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3만 명, 2년 연속 감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보도 자료.
- \_\_\_\_\_. 2024.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4.11.1. 기준).”